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8년 2월 석사학위논문

2008년 2월  
碩士學位 論文

한 · 중 FTA의 기대 효과와  
대응방안

한 · 중 FTA의 기대 효과와 대응방안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왕혜도

왕혜도

한 · 중 FTA의 기대 효과와  
대응방안

A Study on the Expected Effects and  
Countermeasures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2008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왕 혜 도

한 · 중 FTA의 기대 효과와  
대응방안

지도교수 이 성 민

이 논문을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왕 혜 도

王惠濤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위원장      대학교 교수      \_\_\_\_\_ (印)

위 원      대학교 교수      \_\_\_\_\_ (印)

위 원      대학교 교수      \_\_\_\_\_ (印)

2007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제목 차례>

### ABSTRACT

제 I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3
제 II 장 한·중 FTA의 추진배경과 현황 .....	4
제 1 절 FTA의 추진배경 .....	4
1.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 .....	4
2. 주요국의 FTA 체결현황 .....	8
제 2 절 한·중의 FTA 추진현황 .....	21
1. 한국의 추진현황 및 체결 사례 분석 .....	21
2. 중국의 FTA 추진현황 및 체결 사례 분석 .....	29
제 III 장 한·중 경제현황과 FTA의 기대 효과 .....	42
제 1 절 한·중 경제현황 .....	42
1. 한국의 경제개황 .....	42
2. 중국의 경제개황 .....	44
3. 한·중 FTA 체결의 필요성 .....	48
제 2 절 한·중의 교역현황 .....	52
1. 교역 현황 .....	52
2. 투자 현황 .....	56
제 3 절 한·중 FTA의 기대 효과 .....	57

1. 경제적 영향 .....	57
2. 정치·외교적 영향 .....	60
3. 관세에 대한 영향 .....	63
4. 산업별 생산에 대한 영향 .....	66
5. 품목별 교역에 대한 영향 .....	68
제 IV 장 한·중 FTA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	70
제 1 절 한·중 FTA의 문제점 .....	70
1. 경제적 조건의 차이 .....	70
2. 산업발전의 고착화 .....	71
3. 경제체제의 이질성 .....	71
4. 한·중 양국간 무역불균형 심화 .....	72
제 2 절 한·중 FTA의 대응방안 .....	73
1. 정부의 대응방안 .....	73
2. 기업의 대응 방안 .....	80
제 V 장 결 론 .....	84
참고문헌 .....	87

## 〈표 차례〉

〈표 2-1〉 미국의 FTA 체결 추진 현황 .....	10
〈표 2-2〉 EU의 FTA 체결 추진 현황 .....	11
〈표 2-3〉 일본의 FTA 체결 추진 현황 .....	15
〈표 2-4〉 싱가포르의 FTA 체결 추진 현황 .....	17
〈표 2-5〉 인도의 FTA 체결 추진 현황 .....	19
〈표 2-6〉 멕시코의 FTA 체결 추진 현황 .....	21
〈표 2-7〉 한국의 주요 FTA 협상 추진 현황 .....	28
〈표 2-8〉 중국의 FTA 진행 현황 .....	30
〈표 2-9〉 중국의 주요 FTA 협상 추진 현황 .....	40
〈표 3-1〉 한국의 주요 교역동향 .....	43
〈표 3-2〉 한국의 국가별 수출추이 .....	43
〈표 3-3〉 한국의 국가별 수입추이 .....	44
〈표 3-4〉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	45
〈표 3-5〉 중국의 수출입통계 .....	46
〈표 3-6〉 자유무역협정 대상국가 선정 기준 .....	51
〈표 3-7〉 對중국 교역규모 추이 .....	53
〈표 3-8〉 10대 수출입 품목 .....	54
〈표 3-9〉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 규모와 對중국 투자 현황 .....	56
〈표 3-10〉 전체 해외의 對한국투자 규모와 중국의 투자 현황 .....	57
〈표 3-11〉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	58
〈표 3-12〉 관세의 완전철폐에 영향 .....	64
〈표 3-13〉 한국의 산업에 대한 영향 .....	66
〈표 3-14〉 중국의 산업에 대한 영향 .....	67
〈표 3-15〉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 .....	68



## ABSTRACT

### **A Study on the Expected Effects and Countermeasures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Wang hui Tao

Advisor : Prof. Lee Sung Min, Ph. 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Nowadays under the complex world's trading circumstance, regionalism through FTA has become the mainstream forces of the world trading system. A Korea and China have recently announced policy goals to pursue a number of FTAs simultaneously as a way of national strategies. China is Korea's neighboring country that has become the largest trade partner, and has an immense potential for future economic growth. A Korea-China FTA will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of Korea which relies heavily on the foreign export market. Korea aims at implementing comprehensive FTAs involving tariff elimination, service, invest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bring its best effects to the nation.

In this context, China can be a highly beneficial FTA partner for Korea. An FTA with China is a key issue of economic cooperation in

order to confront soaring Chinese competitiveness in international markets. Korea-China FTA will allow Korea easy access to a huge market and reduce the one-sided safeguards of the Chinese government, which will in turn improve Korea's balance of trade.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economic growth of China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Korea's economic growth through a high degree of specialization of industry structure, and improvement of efficiency of investment toward China.

FTA between Korea and China is expected not only to expand the scale of trade but also improve real GDP and the public welfare level in Korea. A Korea-China FTA also can increase the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to give us the benefit in political policy and defense. In other words, a Korea-China FTA helps to achievement of peace and stability in Korean peninsula and North Asia.

A Korea-China FTA has many implications, such as increasing the trading volume and potential economic growth. It is obvious that Korea-China FTA would provide a new impetus for growth. Korea needs to focus on the protection of labor-intensive industries,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increase exports, combining large corporation's exports into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ales.

The positive benefits of free trade are increasing effectiveness through expanding the market and encouraging competitiveness. It will provide Korean companies with the distinct opportunity to work in China.

Indeed Korea-China FTA may have negative aspects, but it is more expected that it will bring considerable economical profits to both nations. In addition Korea and China need to promote a high level of FTA because both nations highly consider FTA as a major trading

partner. Korea-China FTA will not only expand trade between two countries, but also additionally economical and political effects can be expected as productivity increases.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한국과 중국은 현재 자유무역협정(FTA) 준비 단계로 산관학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양국 정상은 FTA 추진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므로 공동 연구 결과가 나오는 내년 봄 이후에는 구체적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잘 알려졌다시피 중국은 한국의 제1무역상대국이 되었다.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 시장 확대 가능성 및 동북아 안보질서 구축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FTA는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측면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유불선의 문화적 공통성과 지리적 인접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높은 공동체 의식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의식이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중 FTA는 다른 국가와의 FTA와 차별화된다.

한국과 중국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FTA는 정치 경제적 효과가 동아시아 역내의 다자간 경제통합보다 약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금까지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만큼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한중간의 FTA가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이유는 역내 다자간 FTA결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한중간의 무역 및 경제교류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한반도의 안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양국간 FTA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제도적 경제통합이 가져오는 안보적 외부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도 양국간의 FTA가 필요하다. 북한과 우호관계에 있는 중국과의 FTA는 북한과의 교류관계를 개선시키고 이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성장 속도가 빠르고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큰 중국 경제에 한국 경제를 결부시킴으로써 침체된 국내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있다. 특히 FTA와 같은 지역경제통합은 참여국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발언권

증대 및 긴장관계해소 등 경제외적 편익도 가져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지난 10여 년간 한·중 역내교역은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왔다. 대중국과의 관계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1%에서 22.2% 이상 증가하였고 한국의 총 수입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점유하는 비중은 5.3%에서 12.5%로 높아졌다. 2004년 현재 중국의 교역상대국에서 한국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이 1위의 교역대상국이다. 이와 같은 한·중 교역의 상호의존도 증대로 한·중 경제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중 경제협력으로 인한 기본적인 편익은 무역장벽을 제거해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한·중 경제통합 시장이 기업들에 더욱 경쟁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중 FTA는 꼭 장점만 존재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중국의 교역관계는 한국이 중국으로 중간재와 부품을 수출하고 중국은 한국에 완제품과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FTA가 추진될 경우 값싼 중국의 제조업 완제품과 농산물이 한국 중소기업과 농가의 생산품을 대체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며 중소기업과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로 제조업의 중국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 국내의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의 실업률 또한 증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지역주의의 흐름에 뒤져 있던 우리 정부도 최근 FTA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거대국가 및 주변국과의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다는 전력을 발표하였다.<sup>1)</sup> 한국은 중국과의 FTA를 통해 경제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중국 기업의 기술능력 향상에 따라 한국의 대중수출이 위축되고 FTA로 인한 무역효과가 잠식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중FTA를 추진함으로써 중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침체는 벗어 날수 있게 되겠지만, 한걸음 더 생각하여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 FTA 체결의 기대효과와 대응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

1) 전국경제인연합회,“우리나라의 FTA추진현황과 대응과제”, CEO Report,2005.6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한중간의 FTA는 양국의 무역 규모를 확대 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적, 정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한중경제협력으로 인한 기본적인 편익은 무역장벽을 제거해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한중 FTA가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FTA추진 배경과 한국과 중국의 FTA추진정책, 교역과 투자현황, 주요국별 FTA를 분석하고 경제적 효과와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에 의한 서술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국회도서관, 대외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들의 정책연구 보고서 및 선행연구 자료들을 분석, 활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총 5장으로,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한·중 FTA의 추진배경과 현황, 정책을 비교, 분석 하고, 제3장에서는 한중 경제 현황과 FTA가 가져오는 rle 효과, 그리고 제4장에서는 한·중 FTA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분석하였고, 마지막 제5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으로 구성하였다.

## 제 II 장 한·중 FTA의 추진배경과 현황

### 제 1 절 FTA의 추진배경

#### 1.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

##### (1) 지역주의의 대두배경

지역주의(Regionalism)란 지역통합이나 경제통합 또는 지역무역협정 등으로 표현되거나 이의 법적 기초가 되는 조약의 명칭을 빌려 지역협정 또는 지역통합협정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 다만 무역블럭이란 표현은 보호무역주의적 색채를 암시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sup>2)</sup> 지역주의는 통합수준에 따라 그 유형을 달리하는데, 상품교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역외공동관계 및 무역정책 실시를 동반하는 관세동맹(Custom Union), 모든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까지를 보장하는 공동시장(Common Market), 공동경제정책 실시를 수반하는 경제동맹(Economic Union), 초국가적인 기구 설치로 모든 경제·사회정책까지 통합하는 완전경제통합(Economic Unification)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지역주의를 형성케 하는 경제적 유인을 살펴보면, 먼저 국경사이에 존재하던 각종 경제장벽을 완화함으로써 경쟁의 촉진, 규모의 경제의 실현 등을 통해 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역내 생산 활동의 경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역내국간의 결속 강화, 거대한 통합시장이 가져올 협상력강화 등으로 해당지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지역주의는 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에서 대두된 것으로 개도국으로 파급되

---

2) 전의천, 『국제무역의 이해』 조선대학교 출판국 1998, p.225

어 갔는데 1970년까지는 세계경제에 대한 미국의 리더쉽, 통합지역의 구조적 취약성과 통합성과 부진 등으로 그 대외적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출현한 EC 통합과 NAFTA등 지역주의 경향은 이 지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통합의 강도 및 속도면 에서 세계경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주의 확산은 크게 다음 2가지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먼저, 국제경제의 역학관계의 변화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세계경제는 표면적으로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를 유지하여 왔으나 그 저변에는 1960년대 이후 일본경제의 급부상, 1980년대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등장으로 EC나 미국의 상대적인 경제력의 저하라는 세계경제력 판도의 변화가 축적되어 왔다. 이를 반영하여 주요 선진국 간에 경제성장을 격차,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현상이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이 계속되자 상대적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 저하된 경제력을 만회하기 전력의 일환으로 자국에는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주의와 지역주의 성향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특히 1980년대 중반이후 냉전체제 종식으로 서방진영의 이데올로기적 결집력이 약해지면서 이러한 경향이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GATT체제의 기능약화와 UR 협상의 지역을 들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해온 다자간 협상기구인 GATT체제가 참가국들의 이해관계 대립 및 의사결정 기능의 비효율성, 그리고 서비스, 투자, 지적소유권 등 새로운 무역영역을 다루고 있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이러한 문제점의 포괄적인 해결을 통해 GTAA의 규범력을 재확립하려는 시도로 1986년 이후 UR 협상타결이 지연되자, 무역문제를 이해관계가 비슷한 국가들 간에 지역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던 것이다.

## (2) 지역주의의 형태

### 1) 지역주의지대



가맹국 사이에는 관세나 기타 무역제한을 철폐하지만, 가맹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관세는 각 가맹국의 자주적인 규제에 맡기는 국가 간의 동맹을 뜻한다. 다시 말해 관세동맹과 같이 지역적인 무역의 확대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가맹국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 공통관세(共通關稅)를 과하지 않는 점에서 있어서 관세 동맹과는 다르다. 경제통합체 중에서 그 통합의 정도가 가장 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32년 설립된 영국의 연방특혜관세제도는 일종의 자유무역지역을 의도한 것이었다. 최근에는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가 1967년 가맹국간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거의 철폐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을 이룩하고 있으며, 1961년 발족한 지역경제통합체인 LAFTA(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가 있다.

## 2) 관세동맹

경제적·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깊은 나라끼리 관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적 단일체를 형성함으로써 동맹국 상호간에 교역의 자유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즉, 협정의 범위와 정도에는 동맹국간의 관세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혹은 경감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동맹국 이외의 나라와의 교역에 대하여서는 동맹국 간의 경우와는 달리 공통관세(共通關稅)를 적용하여야 한다.

대외적인 공통관세 유무에 따라 관세 동맹과 자유무역지역(自由貿易地域)이 구별된다. 즉 자유무역지역은 대내적으로 보면 자유로운 무역이 행하여지는 면에서 관세 동맹과 유사하나 대외적으로는 공통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회원국 독자적으로 관세율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 3) 공동시장

국제간에 일어나는 경제적 통합형태의 하나이다. 경제적인 국경을 철폐하고, 국제간의 무역량 확대와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도모하여 경제적 통합을 이룩한다. 공동시장의 가맹국 사이에서는 무역제한이 철폐되고 자본이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이동도 자유롭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1957년 결성된 유럽경제공동체(EEC), 1994년 1월 출범한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을 들 수 있다.

#### 4) 완전경제통합

국경을 초월한 지역적 경제통합을 하는 일을 뜻한다. 시장 확대에 의한 대규모생산의 이익과 생산성의 제고(提高)를 도모하기 위한 특정 산업부문의 통합, 역내관세(域內關稅)의 철폐, 역외(域外)공통관세의 설정 등의 조치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자본이나 노동의 이동자유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초의 움직임은 1950년 쉬망플랜에 의해 이듬해 유럽 6개국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결성이었다. 경제통합이 가장 대규모적이고 또 성공한 사례는 이 ECSC가 발전한 것으로서, 1958년 1월의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유럽 원자력공동체(EURATOM)의 발족이다.

이를 계기로 지역적 경제통합은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 유럽자유무역주의 연합(EFTA), 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LAFTA), 중앙아메리카공동시장(CACM)·동남 아시아연합(ASA)·아랍공동시장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설립이 검토되기는 했으나, 실현되지 못한 것에 OAE(아시아 경제협력기구)·아시아 아프리카 경제협력기구 등이 있다.

#### 5) 완전정치통합

EC는 경제통합인 동시에 정치통합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유럽합중국방식’과 각국이 주권을 가지면서 정치협력을 하는 ‘국가연합방식’이 대립해왔다. 1970년 이후부터 정기적인 외무장관회의에 의하여 정치협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3년 유럽연합(EU)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편, 경제통합의 내용에 따라 지역주의의 형태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통합의 주체와 통합의 동기에 따라 제도적인 통합과 기능적인 통합, 경제주체들의 통합관계에 따른 수평적인 통합과 수직적인 통합, 경제통합 집행기구의 형태에 따른 기능주의적인 통합과 신기능 주의적인 통합 그리고 통합대상에 따라 전면적인 통합과 부운별 통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3) 지역주의의 비판

#### 1) 지역의 리더의 존재

유럽에서의 EC, 북미에서의 미국과 같은 지역적 리더들은 GATT 성립초기

의 미국의 역할에서처럼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으나, 각 지역의 리더들이 서로 양립될 수 없는 국제교역의 룰을 만든다면 국제교역의 질서는 큰 혼란을 겪을 것이며, 따라서 다자간 룰의 성립은 어렵게 된다.

## 2) 시장접근 측면

지역협정 당사국외의 국가들에게는 지역협정이 그들의 시장접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가 주된 관심사이다. 여기에 대해서 무역장벽의 완화효과가 있어 시장접근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지역협정 당사국외의 국가들은 시장에 적용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적 특혜는 존재할 것이며, 역외국 자신의 시장에 대한 양보 없이는 통합된 시장의 역내국가와 동등한 접근의 보장은 사실상 어렵다.

## 3) 증가된 마켓 파워(Market Power) 의 남용문제

지역협정은 개별국가의 마켓 파워의 합계보다는 큰 마켓 파워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마켓 파워는 다른 국가에 대해 동등한 양허를 받아 내거나,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나 반덤핑조치의 남용 등 보호주의 정책의 레버리지로 사용된다.

이러한 마켓 파워도 양자적으로나 다자적으로 무역을 자유화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지만, EC의 농업정책에서처럼 지역실체의 보호 주의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특히 이런 조치들이 세계무역의 중심국가에서 이루어질 경우, 다자간 무역체제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sup>3)</sup>

## 2. 주요국의 FTA 체결현황

### (1) FTA의 개념

---

3) 전의천, “상계서”, p.237.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이란 정치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호간의 관세 및 수출제한을 철폐함으로써 통상을 자유화하려는 지역간의 협정을 말한다. 각 나라간 교역을 자유화할 경우 무역거래와 국제간 분업이 확대돼 서로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자유주의 경제이론에서 출발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1992년도에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대표적이다.

FTA는 가입국가 이외의 국가에 대한 관세 및 무역정책에는 각 국가가 독자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단일관세 주체로 행동하는 관세동맹과는 차이가 난다. 그러나 FTA 가입국가 이외의 국가와의 무역을 제한하는 역내 보호 무역 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FTA는 한마디로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끼리 서로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특혜 무역협정으로서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지역무역협정 이자 국가간 특수교역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FTA는 상품의 관세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무역국제도 등 정책적인 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실질적인 시장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2) 주요국의 FTA 체결 현황<sup>4)</sup>

### 1) 미국

미국은 세계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경제 대국으로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 창출, 국제협상 무대 및 안보 면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전환하였다. 그 배경에는 노동, 환경, 투자, 경쟁정책 및 남북문제 등 WTO내 산적해있는 이슈들을 다자간 협상을 통해 일괄 타결할 전망이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양자간 FTA가 무역 자유화를 위한 해법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쿠바를 제외한 미주 대륙의 34개국이 참여하는 FTA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지금까지 NAFTA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요르단, 칠레, 싱가포르 등과 FTA

---

4) 주요국별 FTA의 추진현황에 있어서 자료가 미비한 관계로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박재욱의 전제논문 pp.272-287의내용을 발췌 정리하였다.

를 체결하였고, 최근 호주와 FTA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중미권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과의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을 사실상 타결했다. 그리고 아프리카 5개국(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공, 스와질랜드)과는 2004년,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ANCOM 4개국(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과는 2005년내 합의를 목표로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FTA 추진현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2-1> 미국의 FTA 체결 추진 현황**

구분	체결 국가	체결 또는 발효 시기
기 체 결	이스라엘	1985.8 발효
	NAFTA(캐나다, 멕시코)	1994.1 발효
	요르단	2001.12 발효
	칠레	2002.12 체결 2004.1 발효
	싱가포르	2003.1 체결 2004.1 발효
협 상 중	CAFTA(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2004.1 타결
	호주	2004.2 타결
	모로코	2003.1 협상 개시
	아프리카 5개국(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공, 스와질랜드)	2004년 협상 완료 목표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2005년 협상완료 목표
	FTAA(쿠바를 제외한 미주 34개국)	2005년 출범 목표
	바레인	2004.1 협상 개시
논 의 중	남아공	2003.6 협상 개시
	도미니카공화국	2004.1 협상 개시
	이집트/인도네시아/필리핀/ASEAN/파키스탄/파나마/태국	
연구 중	한국/대만/뉴질랜드 등	ITC 타당성 조사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4년 전세계 FTA추진일정” 2004. 참조

## 2) E U

1950년대부터 서유럽 중심의 역내 경제통합을 추구해온 EU는 선진 경제권

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EU는 창설 기초인 로마조약(Treaty of Rome)에서 예정한 과도기간(1958-69)이 끝나고 역내 경제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1970년 이후 지금까지 역외 주요국과 30여 개의 양자간 관세동맹 또는 FTA를 체결하였다.

EU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FTA체결 여부를 결정하며, 상품 교역 외에도 투자와 경쟁, 경치, 과학, 인권, 테러 방지 등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회원국이 15개국에서 27개국으로 확대되는 EU는 지리적 거리를 초월하여 멕시코(2000.7 발효), 칠레(2003.1 발효), 남아공(2000.1 발효)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12개 지중해 연안국가들(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 레바논, 터기, 사이프러스, 몰타)과 6개 CIS국가(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몰도바)와 FTA를 추진하는 외에 MERCOSUR, 걸프협력회의(GCC) 등 주주의 경제통합체와도 FTA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12개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는 2010년까지 개별 협정을 체결하여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다수 국가와 관세동맹 또는 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그 가운데 사이프러스와 몰타는 금년 5월 EU 신규 가입국이기도 하다. GCC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UAE)과는 FTA전제 조건으로 GCC 관세동맹 설립을 제시한 바 있는데, GCC 소속 6개국은 2003년 역사적인 관세동맹을 발효시키고 2010년까지 EU 형식의 통화통합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sup>5)</sup>

**<표 2-2> EU의 FTA 체결 추진 현황**

구분	체결국가	체결 또는 발효 시기	비고
기체	멕시코	2000.7 발효	민간 농산물 제외
	칠레	2003.1 발효	민간 농산물 제외

5) Gulf News(2004.3.1)

결	남아공	2000.1 발효	민간 농산물 제외
협 상 종	MERCOSUR	2001 협상 개시	농산물을 둘러싸고 이전
	12개 지중해연국가(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 레바논, 터키, 사이프러스, 몰타)	2010년 발효 목표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관세동맹: 터키(1996), 사이프러스(2002) .FTA 체결: 튀니지(1995)이스라엘(1 995년 잠정협정 발효, 2000년 신규 협정으로 대체), 모로코(1996), 요르단(1997), 이집트(1999), 알제리(2001)
검 토 종	ACP(African, Caribbean, Pacific) 국가	2008년 발효 예정	
	대만/싱가포르		EU보다는 대만, 싱가포르가 더 적극적
	CIS국가(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크라이나, 몰도바)		협력 협정에 향후 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조항포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4년 전세계 FTA 추진일정” 2004. 참조

### 3) 일 본

그동안 일본은 WTO를 중심으로 다자간 교섭을 통해 무역 자유화의 실현을 견지해 왔으며 지역별 FTA에 대해서는 그다지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자주의를 병행, 양자간 FTA로 다자주의의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이중 접근 방식(Dual Track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를 중층주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추세 외에 중국이 ASEAN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자역내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중국과 ASEAN간에 FTA 체결 협상이 급진전되자, 2002년9월, 일-ASEAN경제장관회의에 앞서 열린 경제 산업성과 ASEAN간의 실무급 협상을 3차례에 걸쳐 ASEAN과의 FTA 체결을 위한 합의도출에 주력하였다. 그 배경에는 일본 경제 산업성 간부의 “FTA의 의의는 경제통합을 구축하는 것이다.ASEAN이 중국에 석권되지 않도록, 국가전략으로서 ASEAN과의 경제통합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말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일본은 1년 앞서 ASEAN과의 FTA 협정을 전개하고 있는 중국에 더 이상 뒤지면 안 된다는 강박 관념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1970년 대 이후 지금까지 일본은 기업의 투자 실적이나 정부개발원조(ODA) 등을 통해ASEAN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였다고 자부해 왔는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ASEAN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어 위기 의식을 갖기 시작한 것이. 2002년 9월 13일 부루나이에서 열린 히라누마 타케오 일본 경제 산업 장관과 ASEAN 10개국의 경제장관간의 각료회의에서 ASEAN과 일본은 FTA를 10년 이내 가능한 한 조기에 체결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11월 5일 프놈펜에서 고이즈미 일본총리와 ASEAN 10개국 정상간 10년 이내에 FTA 창설을 목표로 하는 공동 선언문이 채택됨으로써 일. 중 양국간 ASEAN과의 FTA 체결을 위한 각축전이 본격화되었다. 그 일환으로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2003년 12월 ASEAN 10개국 정상들을 동경으로 초청하여 일-ASEAN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자신의 ‘동아시아공동체·구성을 포함한 동경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역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자유무역권 형성’에 대한 사전조사를 제의하는 등 역내 주도권 확보 의도를 드러내자 그에 대한 응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FTA 추진은 경제적 이외에도 중국과의 동아시아 내 주도권 쟁탈에 대비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2001년 말 동아시아 개발 이니셔티브(IDEA)를 제의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했으나 중국은 물론이고,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의 반발을 초래한 바가 있어 추진이 무산되었었다. 프놈펜 한. 중. 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한.



중. 일 FTA 검토를 제안했을 때, 일본은 한. 일 FTA를 우선 체결하고 이후 일. 중간 FTA를 추진하다는 입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일본은 자국중심의 한. 중. 일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일본은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을 위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 자유화 노선보다 양자간 FTA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2002년 1월 싱가포르와 경제연대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멕시코, 한국, ASEAN 개별 국가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일-멕시코 FTA협상은 2002년 1월부터 시작되었는데, 농산물을 둘러싼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다 금년 3월 12일 타결되었다. 멕시코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한 관세를 협정 발효 10년 이내에 철폐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7년 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일본측은 최대 걸림돌이었던 멕시코산 오렌지주스, 오렌지, 쇠고기, 돼지고기, 등 5개 품목에서 양보하였다. 특히 돼지고기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2.2%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여 협정 발효 첫해는 3.8만 톤을 수입하고 그 후 5년 동안 8만 톤까지 수입량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과는 2002년 7월부터 양국간 FTA에 관한 산. 관. 학. 공동 연구회 활동을 시작하여 2003년 10월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12월부터 정부간 공식 FTA 협정을 개시하였다.

일본과 ASEAN은 2002년 11월 공동성명을 통해 10년 이내에 FTA를 체결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FTA 체결을 위한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서명(2002.11)한 후, 일본과 ASEAN회원국의 고위급 통상관료들은 2003년 3월부터 FTA 체결에 관한 논의를 해오고 있다. 2003년 9월 프놈펜에서 개최된 ASEAN 각료회의에서 일본과 ASEAN은 2005년부터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ASEAN 선발 6개국과는 2012년까지, 후반 4개국과는 2017년까지 협정 완료하여 2020년에 자유무역지대를 완성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동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일. ASEAN 정상회의에서는 FTA를 포함한 경제연대관계를 위한 기본협정(Framework for Comprehensive Partnership)에 서명했다.

한편 일본은 ASEAN 국가와 개별적으로 양자간 FTA를 추진하고 있는데,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와는 2004년부터 협상에 본격 착수하였다. 인도네시아와는 2003년 6월 양국간 FTA 체결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공동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일본의 FTA 추진현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2-3>과 같다.

**<표 2-3> 일본의 FTA 체결 추진 현황**

체결국가	진행상황
싱가포르	2002.1 체결, 2002.11 발효
멕시코	2004.3 타결
한국	2003.12 협상 개시
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	2004년 협상 개시
인도네시아	FTA 공동연구회 설치 합의(2003.6)
ASEAN	FTA 체결을 위한 기본협정 서명(2003.10)
한·중·일	3국간 FTA 공동연구 진행중
ASEAN+3	일-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공동체·추진 구성을 포함한 동경선언 채택(2003.11)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4년 전세계 FTA 추진일정” 2004, 참조

#### 4) 싱가포르

다주주의를 지지하던 싱가포르도 2000년대 지역주의에 적극 가세하기 시작했다. 싱가포르는 2000년 11월 뉴질랜드와 경제연대협정(ANZSCEP)을 체결한 이후 EFTA(2002.6), 일본(2002.1), 호주(2003.2) 등 주요 교역국들과 잇따라 FTA를 체결하고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도 2003년 1월 FTA를 체결하였다. 미국은 아시아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ASEAN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일-싱가포르 FTA는 비록 농산물 등 민감 품목이 제외되긴 하였지만 양국간 FTA의 발효(2002.11.30)로 싱가포르의 대일 수출품물 94%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싱가포르의 대일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모두 철폐되었다.

쟁수출 비중 매우 높은 싱가포르는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중계 무역기지로써, 지경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 중국, 요르

단, 스리랑카, 캐나다, 멕시코, 칠레, 인도 등 다수국가들과 협정을 진행, FTA의 허브(Hub)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싱가포르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FTA에 적극적인 경기 이유는 첫째, 고성장을 구가해 오던 싱가포르가 동아시아의 금융위기와 세계적인 불황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미, 일 등 선진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급속도로 저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GDP는 1998년 -0.1%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1999년과 2000년에는 각각 6.9%와 10.3%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01년에는 다시 -2.0%로 악화되었다가 2002년 2.2%의 성장에 머물렀다. 또한 싱가포르의 대미, 일 시장점유율은 1996년의 2.57%, 2.10%에서 2001년에는 1.31%, 1.54%로 각각 하락했다. 그러자 싱가포르의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등이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중심의 경제협력 강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양자간 FTA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 싱가포르는 이미 자유무역을 꾸준히 추구해 왔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해도 추가개방에 따른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싱가포르는 2002년 당시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26.5%였으며, 서비스업은 67.9%인 반면, 농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이 FTA 체결에 반대하는 세력이 거의 없었다. 셋째,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원재료와 생필품을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제상장을 위해서는 FTA를 통한 대외무역 환경의 개선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정치, 군사적 약소국인 싱가포르는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다수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상호 체제의 연계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FTA 추진현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2-4>과 같다.

---

6) 전 국토의 1% 정도가 채소, 난초류와 관상수 재배용되고 이용되고 있으며, 육류의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아니라 2001년 수산물 어획량은 8.462톤에 불과하였음.

**<표 2-4> 싱가포르의 FTA 체결 추진 현황**

체결국가	체결 또는 발효시기	비고
뉴질랜드	2000.11체결, 2001.1 발효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 체결
일본	2002.1 체결, 2002.11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EFTA	2002.6 체결, 2003.1 발효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호주	2003.2 체결, 2003.7 발효	
미국	2003.1 체결, 2004.1 발효	
멕시코	2000.7 협상개시	
캐나다	2001.10 협상 개시	
인도	2003.5 협상 개시	
한국	2004.1 협상 개시	
요르단	2003.6 협상 개시	
스리랑카 /바나마/ 과나마 / 이집트	2004년 협상 개시 함 의	
중국 / 칠레 등	검토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4년 전세계 FTA 추진일정”, 2004, 참조

#### 5) 인 도

인도 정부는 그동안 FTA 체결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자 역외국으로서의 불이익을 극복하고자 최근 들어 FTA를 추진하고 있다. 2003년 3월 인도에서 개최된 “WTO에서의 지역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동향에 관한 세미나(National Seminar on WTO Negotiations on RTAs)”에서 S. N. Menon 인도 통상산업부 부장관은 세계 무역의 약 60%가 지역무역협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도정부도 지역주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인도가 소속된 SARRC(1985년 설립)는 1995년 12월 특혜무역협정(SAPTA)을 맺고 회원국간 자유무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회원국들의 경제 규모가 워낙 작은 데다 인도-파키스탄간 국경분쟁 등 역내갈등과 정세 불안 등으로 교역 확대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래서 인도는 역내국가들과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스리랑카와 1998년 12월에 맺은 FTA는 인도가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방글라데시와 2003년 3월 FTA는 체결한 데 이어 FTA 협성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SAARC 회원국은 아니지만 아프가니스탄과도 2003년 3월 FTA를 맺고 인도는 아프가니스탄산 건과일, 신선과일, 종자, 허브 등 38개 품물에 대해 50-100%의 양해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은 인도산 흥차, 의약품, 정제설탕, 시멘트 등 8개 품물에 대한 관세를 면세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역외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ASEAN과는 2002년 11월 FTA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2003년 10월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상품에 관한 협상은 2004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05년에 협상을 개시하여 200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는 ASEAN 선발 6개국과 2011년까지, 후발 4개국과는 2016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2003.10)하였다. 이와 함께 인도는 싱가포르와 태국 등 ASEAN국가와 2국간 FTA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와는 2003년 4월 양국 간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방안(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을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태국과는 2003년 10월 FTA 체결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하였다. 특히 태국과는 2004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상품에 관한 협상을 완료하고 2010년까지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며, 서비스와 투자 분야는 2004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협상을 마치고 이행 시기는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다. 양국은 본격적인 협상 이전에 농수산물, 석유화학제품, 귀금속, 자동차 부품 등 84개 물품에 대해서는 조기 자유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들 물품은 2004년 3월 1일부터 관세 인하를 시작하여 2006년 3월 1일부터는 무관세할 예정이다. 인도-태국간의 FTA체결을 위한 기본협정 체결로 최근 동아시아와의 지역협력과 교역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인도의 동남아 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인도-시가포르, 인도-ASEAN간의 FTA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처럼 인도가 ASEAN 국가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ASEAN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여 역내 주도권을 장악하고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중국이 ASEAN과 2010까지, 일본이 2012년까지 FTA를 체결하려고 하자,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라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 때를 맞추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국이 가입하기로 한 동남아우호협력조약에 가입하고 ASEAN과는 중국과 일본이 중간인 2100년까지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밖에 MERCOSUR, 칠레, 우루과이, 남아공 등과 FTA 또는 PTA를 추진하고 있는데, 2003년 6월 협상을 시작한 MERCOSUR와는 금년 1월 PTA를 체결하였으며, 관세 인하 물품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과는 2000년 4월 클린턴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FTA 논의가 일기 시작했으나 그 후 구체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인도의 FTA 체결 추진 현황을 보면 <표 2-5>과 같다.

**<표 2-5> 인도의 FTA 체결 추진 현황**

체결국가	체결 또는 발효시기	비고
SAARC 7개국	1995.12 SAPTA 체결	인도,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BIMST-EC 6개국	2004.2 FTA 기본협정 체결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네팔, 부탄(회원국인 방글라데시는 추후 서명 예정)
스리랑카	1998.12 FTA 체결	
방글라데시	2003.3 PTA 체결	FTA 추진 합의(2003.7)
아프가니스탄	2003.3 PTA 체결	
MERCOSUR	2004.1 PTA 체결	2003.6월 이후 관세인하 협상 진행 중
태국	2003.10 FTA 체결	2010년까지 무관세화 시행 계획
시가포르	2003.5 협상 개시	
ASEAN	2004.1 협상 개시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

		본협정 체결(2003.10)
칠레 / 남아공 / 이집트 / 우루과 이 등	검토 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4년 전세계 FTA 추진일정”. 2004. 참조

## 6) 멕시코

멕시코는 1990년대 들어 자유시장경제정책을 표방하면서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하기 시작, 미국 및 캐나다와 NAFTA를 체결한 이래 32개국(15개 EU회원국 포함)과 FTA를 체결하여 8억 7,000만 명에 달하는 시장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과의 FTA 협상도 타결함으로써 주요 선진국들과의 무역 자유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멕시코의 통상정책 핵심은 지역주의와 양자주의이며, FTA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세계 FTA 허브국을 지향하는 국가전략을 추진하는 반면 WTO 중심의 다자간 또는 일방적인 무역 자유화에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좋은 예로 멕시코는 FTA 미체결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실행관세율은 단순 평균으로 약 16%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며, FTA 미체결국에는 정부조달, 주요 공사 발생 시 내국민 대우를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찰조건 등에서도 차별 대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주로 유럽 및 중남미 대륙의 주요국들과 FTA를 체결해 온 멕시코는 최근 한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멕시코 국내 여론은 대체로 FTA를 지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NAFTA 체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이 급증<sup>7)</sup> 하고 경제성장 효과를 멕시코 국민들이 실감하게 되었으며,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7) NAFTA에 가입하기 전 1988-93년간 연평균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은 37억 50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NAFTA 발효(1994.1.1)이후 1995년 95억 2,600만 달러, 1997년 4,400만 달러, 2001년 246억 3,100만 달러로 급증 추세를 보였음.

<표 2-6> 멕시코의 FTA 체결 추진 현황

체결국가	체결 또는 발효시기	비고
NAFTA	1994.1 발효	미국, 캐나다
볼리비아	1995	
G 3	1995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니카라과	1998	
이스라엘	2007.7 발효	
칠레	1999.8 발효	1992년에 발효한 FTA에 투자, 지적재산권, 기술규정,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을 추가
E U	2000.7 발효	
North Triangle	2001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EFTA	2001.7 발효	
일본	2004.3 타결	
FTAA	2005 출범 목표	
파나마	1997 협정 개시	
우루과이	2002 협정 개시	
아르헨티나	2002 협정 개시	MERCOSUR와의 FTA체결이 목표
MERCOSUR	2002 협정 개시	
브라질/이르헨티나/우루과이	2001년부터 자동차 무역자유화 협정 진행 중	
한국 / 싱가포르 등	검토 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4년 전세계 FTA추진일정” 2004.참조

## 제 2 절 한·중의 FTA 추진현황

### 1. 한국의 추진현황 및 체결 사례 분석



한국은 GATT로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한국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명실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한국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1998년 국무총리 주재 대외경제조정회의에서 칠레와의 FTA를 우선 추진하고 칠레와 유사한 소규모 국가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후 관계부처 합의하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FTA는 정밀 검토 후 대외경제조정회의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sup>8)</sup>

한국의 FTA 추진전략의 기본 방향은, 첫째,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이다. 이는 그동안 FTA를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기회비용을 단시간에 만회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FTA를 동시에 추진하여 발효시킴으로써 각 FTA별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 보완하여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하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또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FTA 추진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 필요하다. 즉, 동시에 둘 이상의 나라와 협상을 진행할 경우 협상 상대국끼리 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한 국가와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 주력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up>9)</sup>

둘째, 단계적인 FTA 추진이다. 정부는 2003년 FTA 추진 로드맵을 수립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추진이 바람직하나 단기적으로는 우선 가능한 국가를 경제적 타당성, 선진 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도움이 되는 국가, 정치, 외교적 합의 등 몇 가지 기준으로 선정하여 경제적 실리도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 FTA 추진 대상국은 일본, 싱가포르, ASEAN, 멕시코 및 EFTA 등이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국, EU, 중국 등의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셋째,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지향한다. 즉,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세 철폐 등 상품 분야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

---

8) 이종원 등 『한-EU FTA현황과 전망 그리고 추진전략』 높이깊이 출판국 2007.6 PP118

9) 박순찬, 『한국 FTA 추진의 전망과 과제』, 『KIEP 세계경제』 5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p.2.

재산권, 기술 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한다. 한국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도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 재산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그 후에 체결한 한-싱가포르 FTA 및 한-EFTA FTA도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여 체결된 FTA이다.

넷째, 이러한 FTA 추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투명성 제고,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 획득, FTA의 체계적 준비를 위해 2004년 6월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을 제정하였다. 동 규정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FTA 추진의 최고 심의, 의결 기관으로 두고 심의 기구로는 통상교섭 본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 1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구성되는 ‘FTA추진 과정에서 관련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협상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FTA추진위 산하에 학계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FTA민간자문회의’를 설치하였다. 또 협상을 개시하기에 앞서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각계 의견이 수렴 가능하도록 하였다.<sup>10)</sup>

#### (1) 한-칠레 FTA

한국 최초의 FTA이자 아시아 국가 중 남미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는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첫 대상국으로 선정한 이래 6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3년 2월 공식 서명하기에 이른다.

한-칠레 FTA 협정문은 전문과 21개 장(Chapter)의 협정문 및 농산물, 공산품 등의 시장개방 내용을 담은 상품 양허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국의 개방 정도를 살펴보면, 품목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94.5%, 칠레는 96.5%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관세를 최장 10년 내에 철폐하기도 합의했다. 한국은 품목에 따라 즉시, 5년, 7년, 9년, 10년, 16년간 관세 철폐와 양허 제외, DDA 이후 논의 등 모두 10개로 분류하여 자유화하기로 했다. 한편 칠레는 즉시, 5년, 7년, 10년, 13년, 양허 제외 등 6개 카테고리에 따라 자유화하기로 했으며 GATT 제11조에 의하지 않은 쿼터, 수입 허가 등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

10) 이종원 등“진개서”,pp119

농산물은 WTO 농업협정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주요 품목별 관세 양허를 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 대 칠레 수출의 67%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은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편 냉장고와 세탁기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대 칠레 주요 수입농산물 중 쌀, 사과, 배의 경우는 양허를 제외하기로 했으며 포도의 경우 양국이 각기 남반구와 북반구에 위치한 점을 고려하여 계절관세(11월~다음해 4월에 수입되는 포도의 관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공산품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특혜 관세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원산지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으며 농산물의 경우 제3국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한편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칠레와의 FTA에 정부조달 자유화 협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25억~30억 달러에 이르는 칠레 정부 조달 시장에 진출할 계기를 마련했다. 양국은 또한 지적재산권 협정에서 유명 상표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 분야에서는 설립 전 단계에서 내국민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상호간 투자 기회를 넓히고 설립 후 단계에서는 최혜국 대우, 이행 의무 금지 및 분쟁해결 절차 등의 조항을 통해 기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였다.<sup>11)</sup>

## (2) 한-싱가포르 FTA

한국의 두 번째 FTA는 싱가포르와의 FTA로 동 FTA는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5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여 2006년 3월 2일부터 발효되었다.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상품 분야에서 우리는 싱가포르에 대해 대부분의 품목(품목수 기준 91.6%)에 대한 관세를 10년내 철폐되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 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싱가포르는 현재 실행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소주, 맥주 등 주류 6개 제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

11) 한국무역협회, 『한-칠레 FTA 발효 3년 평가』 2007b.

원산지규정 관련 역내부가가치기준은 대체로50%(공제법)수준에서 타결되어 한-칠레FTA의 45%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관 발급제를 채택했다.

한편 한-싱가포르 FTA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경제특구인 개성공단에 대한 특혜 관세 적용이 이루어져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WTO 서비스협정(GATS) 수준 이상으로 자유화하는데 합의했으며 구체적으로 건축서비스, 해상화물처리서비스, 오락 및 문화 서비스 등에서 싱가포르의 시장 개방이 확대되었다. 중앙 정부 기관 물품 및 서비스 분야 조달과 관련하여 현행 양허 하한선을 WTO GPA 수준이 13만 SDR<sup>12)</sup>에서 10만 SDR로 인하하였다. 또한 상호인정 관련하여 전기용품안전 및 통신기기 분야를 대상으로 우리나라로서는 최초로 정부 간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sup>13)</sup> 체결에 합의했다.<sup>14)</sup>

### (3) 한-EFTA FTA

한-EFTA FTA는 한-칠레 및 한-싱가포르 FTA 협상 과정에서 생긴 노하우와 더불어 협상 담당자들의 제고된 전문성 덕분에 2005년 1월 협상을 개시하여 불과 6개월이 경과한 2005년 7월 4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협상을 타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양측은 2005년 12월 15일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정식 서명했으며 한-EFTA FTA는 2006년 9월 1일 발효되었다.

한-EFTA FTA 협정문은 전문(前文)과 본문 10개장, 부속서 13개 그리고 농업 및 투자와 관련한 별도 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HS 25류 부터 97류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과 가공농산물 그리고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물은 상품 협정에서 다루며 HS 1류 부터 24류에 해당하는 농산물의 경우는 한국-아이슬란드, 한국-노르웨이, 한국-스위스 등 양자 농산물 협정에서 다루도록 했다.

---

12)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 IMF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형태의 화폐로 1 SDR은 약 1.5달러에 해당

13) 상호인정협정: 제품, 제조공정, 서비스가 자국의 표준 또는 기술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상대국의 판정 결과를 인정하는 제도임

14) 한국무역협회, 『한-싱가포르 FTA발효 1주년 평가』 2007a

EFTA는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공산품, 수산물)에 대하여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총 10,114개 품목 중 99.1%인 10,019개 품목을 양허하고 86.3%에 해당하는 품목(8,726개)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EFTA측의 공산품 MFN 평균 실행관세율은 스위스(리히텐슈타인)2.5%, 노르웨이0.9%, 아이슬란드 2.6%이다. EFTA측의 주요 고관세 품목은 의류 및 직물, 귀금속제품, 각종 조제식품 등인데 특히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류 등의 보호 수준이 매우 높는데 동 품목에 대해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었다.

수산물의 경우 EFTA측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은 상당한 정도의 자유화를 용인했으며 고등어 등 한국의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도록 했다. 농산물의 경우 한국과 EFTA 모두 민감하게 다루어야 하는 품목이므로 상당한 정도의 공정과정을 거친 가공농산물은 FTA본 협정에서 양허내용을 규정하고 순수한 의미의 기본농산물은 별도의 양자협정을 통해 양허했다. 주요 양허 내용을 보면 아이슬란드는 사과, 배, 쌀 발효주, 김치 등에 대해 무관세이며 버섯류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했으며 노르웨이는 김치에 대해 96%의 관세를 감축하고 사과와 배는 계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스위스는 김치와 쌀 발효주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했으며 사과와 배는 쿼터 또는 계절 관세를 통해 일부 양허했다.

원산지 규정 관련 원산지 판정 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원산지 결정 가격은 기존 FOB에서 공장도 가격(Ex-Work)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한편 역외가공<sup>15)</sup> 조항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sup>16)</sup> 을 충족하는 경우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하도록 했다. 통관절차에서는 기존에 한국이 채택해왔던 직접 검증 방식과는 다른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했는데 원칙적으로 수출국의 세관 당국이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대신 수출국 세관당국의 현지조사 시 수입국 세관직원이 검증과정에 참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비스 무역 관련, GATS를 기본

15) 역내생산(1단계)→역외가공(2단계)→재수입후 역내 최종생산(3단계)과 같은 생산단계에서 이전의 역내 부가가치(1단계)를 역외가공 이후의 역내 부가가치(3단계)와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영역 원칙으로부터 면제'라고 불리기도 함.

16) HS 6단위 267개 품목에 대해 당사국에서 수출되고 추후 그 당사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해 당사국 영역 밖의 지역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

으로 하여 DDA 2차 양허안 수준으로 양허하기로 했으며 특히 방송서비스의 경우 한국의 방송 관련 프로그램의 EFTA진출이 유리해지도록 TV방송 프로그램의 공동 제작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성공했다.<sup>17)</sup>

#### (4) 한-ASEAN FTA

한국과 ASEAN은 2004년 3월 제1차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FTA논의를 시작했으며 2004년 8월 공동연구를 종료했다. 양측은 2005년 2월 자카르타에서 제1차 협상을 개시했으며 2005년 12월 상품 분야의 자유화 방식에 합의하고 2006년 4월 상품무역협상이 타결했다. 2007년 4월 2일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6월1일 발효되었다. 단 태국은 국내 사정상 상품 타결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ASEAN FTA 상품 협정에는 일단 태국을 제외한 ASEAN 9개국과 한국이 당사국이 된다.

한국과 ASEAN은 원칙적으로 2010년까지 각각 수입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2016년까지 나머지 7%에 대해 관세를 0~5%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 3%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각국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 제외, 장기간 관세 인하, 쿼터 설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국은 쌀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감 농수산물을 양허제외, 관세 이행 기간의 장기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는 초민감 품목 3%에 포함함으로써 시장 개방에 따른 출격을 방지했다. 쌀을 포함하여 닭고기, 활어 및 냉동 어류, 마늘, 양파, 고추, 대부분의 과일을 양허제외 품목으로 설정했다. 상품에 대한 협정을 타결 지은 후 현재까지 서비스 및 투자 등 잔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

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ASEAN FTA 상품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07.

**<표2-7> 한국의 주요 FTA 협상 추진 현황**

단계	대상	현황
발효/체결	칠레	2004. 4 발효
	싱가포르	2006. 3 발효
	EFTA	2006. 9 발효
	미국	2007. 4 협상 타결
협상중	EU	2007. 5 제1차 협상
	캐나다	2007. 4 제10차 협상
	ASEAN*	2006. 4 상품무역협상 타결 2007. 4 제17차 협상(서비스 및 투자본과)
	인도	2007. 4 제6차 CEPA 협상
	멕시코	2006. 6 제3차 협상
	일본	2004. 11 제6차 협상
공동연구/검토중	GCC**	2007년 중 협상출범을 위한 여건 조성
	중국	2007. 3 제1차 산관학 합동연구
	MERCOSUR***	2006. 13 제3차 공동연구
	호주	2006. 12 양국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
	뉴질랜드	2006. 12 양국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

주:\*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국가연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그간 상품협상에 불참했던 태국과도 협상 재개)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MERCOSUR(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 2. 중국의 FTA 추진현황 및 체결 사례 분석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화가 경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촉진하다는 이유로 중국은 초기에는 FTA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화를 ‘중국의 부상’을 위해 적극 이용함으로써 장차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의 양대 주도세력으로 발전하려는 계획을 추구하게 되었고, 특히 아시아의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안정성 확보와 WTO 가입 이후 개방 확대요구로 인해 FTA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FTA에 대한 관심은 첫째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로 무역비용이 낮아짐으로써 시장접근성이 향상되면, 둘째 중국기업들이 새로운 원자재와 설비를 더 낮은 비용으로 획득함으로써 중국 소비자들이 고품질 저가격의 상품과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하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은 각기 자국 중심의 구도를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과의 FTA 추진에서도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sup>18)</sup> 따라서 이러한 상황하에서 중국은 앞에서 언급한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FTA를 통하여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역통합의 구도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FTA 전략은 경제권역과의 FTA 협정과 양자 FTA협정으로 구성된 분명한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지역적 통합의 이상적인 형태는 ASEAN+3(한국, 중국, 일본)을 기본 틀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일본과 한국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최근 인도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도 FTA를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현재 다수의 국가·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FTA의 추진단계는 양 당사국간 FTA의 추진의사를 확인하게 되

---

18) 조현준(2004), p.14



면 우선 FTA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FTA feasibility study)를 진행하고(1 단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을 전개하여 FTA 협정 최종 의에 도달한 후 (2단계), 마지막으로 국내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되는 단계(3단계)로 나눌 수 있다. 협상단계별로 중국의 FTA 추진국 현황을 살펴보면<표 2-8>과 같다.

**<표2-8> 중국의 FTA 진행 현황**

협상단계	해당 국가
1단계	한국, 일본,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2단계	호주, 뉴질랜드, 걸프협력회의회(GCC: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방,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3단계	홍콩, 마카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칠레, 파키스탄
기타*	상하이협력기구(SCO: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주: 1단계-FTA 타당성 공동연구

2단계-협상 전개 및 FTA 협정 최종합의에 도달

3단계-국내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되는 단계

\* 공동연구는 하지 않았으나 FTA 추진에 합의한 국가임

자료: 李章揆 등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p.31

이 중에서 중국의 FTA 협상 주요국은 FTA를 이미 체결한 ASEAN 10개국과 칠레, 파키스탄을 비롯하여, 경무관계긴밀화협정(CEPA)을 체결한 홍콩, 마카오, 현재 FTA 공식협상을 진행 중인 호주, 뉴질랜드, 걸프협력회의회(GCC), 그리고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한국, 인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아직 공동연구 단계까지 진전되지 않았지만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과도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합의한 바 있다.<sup>19)</sup> 이 중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서방 선진국 중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MES)를 인정함으로써 중국과의 FTA 협상을 먼저 시작하였고 유럽국가로는 아이슬란드, 아프리카국가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중국의 MES를 인정함으로써 중국과의 FTA 협상을 조기에 착수하였다.<sup>20)</sup>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10월 기준으로 중국은 27개 국가·지역을 포함하는 9건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2005년 중국의 이 국가·지역들과의 무역액은 대외무역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약3,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1)</sup>

한편 중국이 FTA 추진에 소요하는 시간은 협상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FTA 추진과정은 양국이 FTA 추진의사를 확인한 이후 본격적인 협상의 준비단계로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시점에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상을 개시하게 된다. 중국의 경우 공동연구 기간은 길게는 1년 5개월(중·호주)에서 짧게는 4개월(중·뉴질랜드)이 소요되었는데 공동연구에 소요되는 시간이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FTA 추진합의 이후 양국간 진전의사의 강도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up>22)</sup> 중국이 OECD 국가 중 최초로 FTA 추진에 합의한 뉴질랜드의 경우, 중국에 대한 뉴질랜드의 MES 인정 이후 양국이 FTA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공동연구에 가속도가 붙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호주는 뉴질랜드보다 먼저 FTA 타당성 공동연구를 시작하였으나 MES 인정을 주저한 결과 이에 앞서 MES를 인정한 뉴질랜드보다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뒤처지게 되었다. 이것이 중·호주 FTA의 공동연구 기간을 연장시킨 주요한 원인이며, 이는 공동연구 기간이 FTA 내부적 고려사항의 복잡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양국간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격적인 협상라운드의 시작에서 협상 체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협상라운

---

19) SCO 회원국은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다.

20) 뉴질랜드는 2004년 4월에, 호주는 2005년 4월에 각각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였다.

21) 新京報(2006.9.18), 中智自貿協定下月實施 我5891種產品出口智利零稅

22) 중·ASEAN FTA의 경우 1년, 중·칠레 FTA는 7개월, 그리고 중·파키스탄 FTA의 타당성 공동연구에는 6개월이 소요되었다.

드 횟수는 공동연구 기간보다 국별 차이가 더욱 크다. 중·ASEAN FTA의 경우 2001년 11월 개시된 협상라운드가 2004년 11월 FTA 합의에 이르기까지 3년간 17차에 걸쳐 진행된 반면, 칠레와의 경우는 1년간 네 차례 협상을 끝으로 FTA가 타결될 정도로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단일국가가 아닌 ASEAN과의 FTA가 가지는 복잡성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현저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는 칠레에 앞서 FTA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FTA 협상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중국의 FTA 추진 과정에서 소요시간과 협상 횟수는 협상 상대국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협상의 양자적 성격으로 인해 이러한 차이가 중국의 협상태도에서만 비롯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중국이 협상국가로서 리스크가 크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하는 반면, 협상 체결의 합의가 비교적 중요하고 리스크가 큰 국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일례로 중·칠레 FTA를 신속하게 진행했던 것과 유사하게 중·파키스탄 FTA의 경우에도 공동연구에 단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공동연구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조기자유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한바 있다.

#### (1) 중국-ASEAN

중국과 ASEAN 10개국은 2000년 11월 FTA 타당성 연구를 개시한 이래 2001년 11월 FTA 계획을 초안한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2004년 11월 FTA 합의에 이르기까지 17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였다. 2004년 11월 29~30일 제 10차 ASEAN정상회담에서 ASEAN은 중국과 2010년까지 자유무역시대 창설을 완료하는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2005년에 일부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였으며 2010년까지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예정이다. 중국과 ASEAN은 제 1단계로서 2004년 중 농산물 관세를 낮추고 2006년에는 완전 폐지하였으며 조기 자유화조치(Early Harvest Program)에 따라 농산품 573개 품목 중 63개는 무관세, 69개는

5~10%, 435개는 11~36%, 6개 품목은 특별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르면 현재 8.1%인 중국과 ASEAN의 평균 관세율을 2007년에 6.6%, 2009년에는 2.4로 인하하고 2010년 1월 1일부로 90%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양측은 정보통신, 인적자원개발, 상호투자 및 메콩강 개발, 교통, 에너지, 문화, 여행 및 공공위생 등 서비스 무역과 투자 부문에 대해서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과 ASEAN의 양자 무역액은 1991년 8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약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2008년 무역액은 약 2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0년에 중국과 ASEAN은 인구 18억명, 무역 규모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인구, GDP 총량이 EU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ASEAN FTA는 NAFTA, EU와 함께 3대 경제권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ASEAN과 상품무역에 관한 FTA 협정을 가장 먼저 체결함으로써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해외 투자·진출 대상지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구도 속에서 주도권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중국이 아시아지역에서 다방위 . 다형식의 지역일체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ASEAN+1 구도는 중국의 서남방향으로의 지역일체화 전략의 일환임을 의미한다.<sup>23)</sup>

## (2) 중국-칠레

중·칠레 FTA 상품무역 협정은 2005년 11월 18일 부산 APEC 회담기간 중 체결하였으며 칠레 의회의 국내비준을 거쳐 2006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중·칠레 FTA 협상은 2002년 칠레가 중국에 먼저 제안한 후, FTA타당성 연구를 거쳐 2004년 11월 후진타오 주석의 칠레 방문 때 공식협상 개시가 선언되

---

23) 郭继丰(2005년9월 13일자), 「中国FTA战略合作共赢全球均衡」, (第一财经日报), 중국은 서북 방향으로 중앙아시아, 동북 방향으로 러시아와 몽골, 동쪽 방향으로 북한, 한국, 일본 등과 지역일체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형식은 각국의 경제발전수준과 경제구조, 자원 분포 등에 따라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었다. 양국은 2005년 5차에 걸친 공식협상 끝에 11월 18일 FTA 상품협상에 최종 합의 하였다. 중·칠레 FTA는 중국이 ASEAN과의 FTA 체결 이후 단일 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 협정인 동시에 남미 국가와 맺은 첫 번째 FTA 협정이다.

중·칠레 FTA 협정이 2006년 10월 1일 부로 정식 발효됨에 따라 칠레는 중국산 5,891종의 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였고 중국은 칠레산 2,806종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다. 또한 2007년에 중국은 1,947종의 칠레산 제품에 대해 무역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양측이 관세를 삭감한 주요 품목은 농산품, 화공제품, 방직의류, 전기설비제품 등이며 전체 관세 품목의 97%에 대해 5년 또는 10년 이내에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FTA의 정식 실시 이후에 양국은 서비스 무역과 투자 협상을 시작하여 여행, 운송, 건축, 전신, 공정 설계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협상을 전개하여 시장진입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양국간 무역과 투자 발전을 촉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칠레 FTA는 비록 상품무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협정이 발효되면 중국은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전체 수입품의 37%(이 중에는 대 칠레 수입총액의 92%를 차지하는 구리가 포함됨)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되며, 칠레는 75%의 중국산 수입품(총액 50% 수준)에 대하여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되어 양국간 무역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과 칠레의 무역액은 2000년 이래 연평균 22%씩 증가하여 2005년에 7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칠레는 남미에서 브라질, 멕시코에 이은 중국의 3대 무역 대상국으로, 중국은 칠레의 2대 무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주로 섬유, 신발, 장난감, 하이테크 제품을 칠레에 수출하고 있으며 구리, 종이펄프, 철강 제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이 협정 발효를 계기로 현재 40억 달러인 대중 수출 규모가 2008년에는 8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중·칠레 FTA를 통하여 자원의 공급처로서 주목하고 있는 남미와의 교역에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 주석은 2004년에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쿠바 등을 방문하여 석유·철광석·목재 및

기타 에너지를 확보하는 등 에너지 외교의 성과를 거두었고, 일부 국가로부터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받기도 하는 등 중남미국가와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양자간 FTA의 파트너로서 비교적 용이하다는 이유로 칠레와의 FTA추진을 급속하게 진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에 대응하여 자원 공급처로서 남미를 주목하고 있으며 칠레와의 FTA가 남미에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칠레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와 남미간 무역경로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남미의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을 꾀하고 있는 칠레는 중국기업들의 남미 투자 및 경영활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이 협정을 서비스와 투자 부문에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중국-뉴질랜드

중국과 뉴질랜드는 2004년 5월 무역경제협력기본협정(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을 체결하고 양국간 FTA에 대한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4년 10월 공식적으로 FTA협상을 개시하였다. 2004년 12월 1차 협상에서 양국은 자유무역 상품의 범주와 관세 삭감 모델에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2005년 2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2차 협상에서는 상품과 서비스 관련 관세 삭감과 투자 촉진 등의 이슈를 다루었다. 이후 2006년 10월에 개최한 9차 협상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규범을 제정하였으며 양국 전문가들은 원산지규정과 시장 진입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논의하였다. 양국은 2007년 1월 베이징에서 10차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며 2007년 4월부터 1년 이내에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5년 양국간의 상품무역액은 약 50억 달러 규모인데 조만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뉴질랜드의 3대 무역대상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4) 중국-GCC

중국과 GCC는 2004년 7월 경제, 무역, 투자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Framework Agreement on Economic, Trade, Investment, and Technical Cooperation)에 서명하였으며, 2005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서 FTA 협상을 개시하였다.

양측은 상품부문에 대한 협상을 추진한 후 서비스, 투자 및 기타 부문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완전 자유화까지 FTA 체결할 경우 중국은 정유 및 석유화학 제품의 확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FTA협상의 주된 주제는 관세율 인하, 수출입 절차 간소화, 양 지역 간 투자 확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3차 FTA 협상에서는 세관 검사과정, 무역 기술 장벽(TBT),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SPS), 무역구제 및 상품무역관련 법률문제, 자유무역협정 원문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GCC는 중국산 의류, 직물, 전기통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며 중국은 GCC의 석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및 기타 화학제품에 대한 막대한 수요가 있는 상태이다. 2005년 중국의 GCC에 대한 수출액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138억 달러, 수입액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20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2005년 말 중국이 GCC 지역에서 체결한 건설수주 및 노무계약의 누액은 각각 66억 달러와 10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GCC의 중국 투자액은 7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중국과 GCC는 2010년 양자간 무역규모가 1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2위의 원유소비국인 중국은 세계 원유매장량의 절반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GCC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왔다. 중국의 석유수입은 2004년에 200만b/d에서 연간 40만b/d씩 증가하여 2025년에는 약 1천만b/d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대중동 석유수입량이 2004년 90만b/d에서 2025년에는 700만b/d로 증가하여 중동의존도가 현재의 45%에서 7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5) 중·파키스탄 FTA

2006년 11월 24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이 공동합의하에 중국과 파키스탄은 FTA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파키스탄은 중국이 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양국간의 FTA 논의는 2004년 12월 파키스탄 총리의 방중시에 양국 FTA공동연구 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중·파키스탄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데서 시작되었고 같은 해 12월에 파키스탄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더욱 가속화 되었다. 이 특혜무역협정은 중국이 외국정부와 체결한 최초의 양자 특혜무역협정으로서 중국이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sup>24)</sup>

양국은 2005년 4월 중·파키스탄 FTA 틀 속에서 조기자유화조치를 체결한 후, 2005년 8월 무관세 적용 품목 리스트를 발표하였다. 중·파키스탄 FTA는 앞서 체결한 특혜무역협정이 조기자유화조치의 부분을 이루게 됨으로써 특혜무역협정의 내용을 FTA 협상의 틀 안으로 흡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 후 양국은 시장진입, 원산지규정, 기술적 무역장벽(TBT),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SPS), 무역구제, 투자, 분쟁해결, 협력 등의 의제와 관련해 여섯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2006년 11월 24일 협상내용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중·파키스탄 FTA에 따라 양국은 두 단계에 걸쳐 전체 화물상품에 관세인하를 실시할 예정이다. 1단계로 양측은 협정 효력 발생 후 5년 동안 각자의 관세 목록 중 85%에 달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인하를 실시하며, 이 중 36%의 제품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중국의 관세인하품목은 주로 축산물, 수산물, 채소, 광산제품, 섬유제품 등이며, 파키스탄은 소고기, 양고기, 화공제품, 기계, 전자제품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 2단계로 양측은 협정 효력 발생 이후 6년째부터 1단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각자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 인하하게 된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가까운 장래에 세수등록 및 무역량에서 각자의 무관세제품 비율을 각각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25)</sup> 중·파키스탄 FTA는 상품 무역자유화 외에도 투자 촉진과 보호, 투자대우, 징수, 손해보상 및 투자분쟁해결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을 만들어 양측의 투자를 계속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산지

24) 賓建成, 陳柳欽(2005)「世界雙邊FTA的發展趨勢與我國的對策探討」, [經濟學研究], No.11.(Nov)

25) 中華網(2006.11.27), 「中國和巴基斯坦簽署自由貿易協定」。



규정, 무역규제, TBT, SPS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2006년 1월에 시작된 조기자유화조치로 양국간 수출입 평균관세는 27%가 면세(직물), 피혁제품과 해산물이며 중국은 주로 기계설비, 화공, 전자 및 신발류를 수출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쌀, 과일 및 부가가치가 높은 방직품 등을 수출하고자 하며, 조기자유화조치의 실시로 이미 망고와 감귤 등이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 2005년 양자 무역액은 42억 6천만 달러로 2004년 대비 39% 증가하였고, 2006년 1~3월까지 양국 무역액은 10억 1,8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2.3% 증가하였다.

양국은 매우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파키스탄의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의 주요 무기 공급처이기도 하다. 파키스탄 역시 중국의 핵심 관심사인 대만, 티벳 인권문제에 대해서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sup>26)</sup>

#### (6) 중·호주 FTA

중·호주 FTA는 2005년 4월 18일 호주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승인함으로써 선진국 중 뉴질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정부간 협상을 개시했으며 현재까지 총 일곱 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제8차 협상은 2007년 3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투자영역의 제한조치를 철폐하는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7차 협상에서 양국간 협상 진행에 난항을 초래한 이슈는 중국의 농업개방문제, 서비스와 투자 영역을 포함한 포괄적 FTA 체결, 협정문 작성시 원산지규정과 지식재산권 문제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입장차이의 문제 등이다. 한편 서비스 영역에서 양국은 서비스시장 진입(은행업, 보험 및 주식, 펀드 매니지먼트 포함), 교육, 건설, 엔지니어링,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 등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하였다. 호주 정부는 2007년 3월의 8차 협상에서 통신, 교통 및 물류, 회계, 여행, 광산업 및 환경서비스 영역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과 호주의 무역액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

26) Reuter"China signs free trade pact with Pakistan" 2006.11.24

2005년 양국간의 무역액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284억 3,800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호주는 중국의 9대 무역대상국, 중국은 호주의 2대 무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주로 자원 확보 차원에서 호주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철광석 수입에서 호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는 등 호주는 중국에 있어 철광석, 아연, 니켈, 알루미늄 등의 주요 수입원이다. 또한 2002년 중국은 호주로부터 25년에 걸쳐 약 190억 달러 상당의 LNG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한편 2004년 중국의 대호주 농산물 수출은 2억 4,400만 달러인데 반하여 호주로부터의 수입은 24억 달러에 달해 호주의 농업계는 FTA 체결시 중국 농산물시장 접근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열악한 상황에 있는 7억 4천만명의 중국 농민에 대해 문제를 잘못 처리할 경우 사회불안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로 농업시장 개방에 대해 유보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호주는 자국의 수출농산품이 중국의 전체 농산물 생산과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으며 경작 가능한 토지와 수자원의 문제로 호주의 식량생산능력 확대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의 개방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6년 4월 중국 보시라이(薄熙来) 상무부장은 2년 이내 중·호주 FTA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제시한 바 있으나, 중국의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자국 농민이 받게 될 피해에 대한 우려 및 호주의 공산품 관세삭감으로 인한 국내 제조업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협상 진전에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호주가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부문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중국은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해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 (7) 중·홍콩 CEPA

경무관계긴밀화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은 중국이 홍콩 및 마카오와 체결한 경제협력 협정이다. CEPA는 FTA와 유사하지

만 그 범위가 FTA보다 넓다. 중. 홍콩 CEPA는 2001년 11월 홍콩특별행정장관 도널드 창이 중국 중앙정부에 제출한 ‘유사 자유무역지대’ 구상에 의해 기초가 마련되어 2002년 초 중앙정부의 지시 하에 1년 6개월에 걸친 협상이 시작되었다. CEPA 1단계와 2단계는 각각 2003년 6월 29일과 2005년 1월1일에 체결되어 1,108종의 홍콩제품이 무관세로 중국 내륙에 수출되는 길이 열렸다. 그 내용은 주로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홍콩제품의 무관세 내륙 진입, 서비스업 개방 및 양 지역의 무역원활화이다. CEPA 3단계가 체결된 후 261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1,369종이 무관세를 적용받게 되었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홍콩에서 제조업 신청을 거쳐 CEPA 원산지규정에 부합하는 모든 홍콩산 제품은 중국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표2-9> 중국의 주요 FTA 협상 추진 현황**

단계	대상	현황
발효/체결	홍콩	2003. 6 CEPA 체결
	마카오	2003. 10 CEPA 체결
	ASEAN	2005. 7 상품무역협정 발효 2007. 2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칠레	2006. 10 상품무역협정 발효
	파키스탄	2006. 11 체결
협상중	호주	2007. 3 제8차 협상
	뉴질랜드	2007. 4 제11차 협상
	GCC	2006. 7 제4차 협상
	싱가포르	2007. 4 제2차 협상
	아이슬란드	2007. 4 제1차 협상
공동연구/검토중	한국	2006. 11 산관학 공동연구 착수
	일본	2006. 10 상무부, FTA 체결 검토의사

		표명 2007. 제4차 공동연구 개시
	페루	2007. 2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

# 제 III 장 한·중 경제현황과 FTA의 기대 효과

## 제 1 절 한·중 경제현황

### 1. 한국의 경제개황

1960년대부터 수출지향적인 경제정책으로 한국경제는 급성장하여 1996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한국경제는 심한 타격을 입었고 2000년에 IMF체제에서 벗어나면서 경제는 다시 회복추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또 다시 내수경기 침체, 국내 기업불황 등 원인으로 침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무역수지는 <표 3-1>과 같이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2001년에는 94.3억 달러, 미국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흑자폭이 감소하였으며 2002년부터 수출은 호전되고 있다. 2005년 수출은 2,844억 달러, 수입은 2,612억 달러로 기록하고 있다.

한국 무역비중이 <표 3-2>와 같이 미국, 일본에 집중되었으나 1990년대부터 중국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커지면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등장하였다. 2005년 대중국 수출은 619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이며 대미 수출은 413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이었다. 미국, 일본, EU 등 3대 선진국 시장 수출 비중은 증가추세로 보이지만 중국이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표 3-1> 한국의 주요 교역동향**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경제성장률(%)	8.5	3.8	7.0	3.1	4.7	4.0
수출(억 달러, %)	1,722.7 (19.9)	1,504.4 (-12.7)	1,624.7 (8.0)	1,938.2 (19.3)	2,538.4 (31.0)	2,844.2 (12.0)
수입(억 달러, %)	1,604.8 (34.0)	1,410.9 (-12.1)	1,521.3 (7.8)	1,788.3 (17.6)	2,244.6 (25.5)	2,612.4 (16.4)
무역수지(억 달러)	117.9	93.4	103.4	149.9	293.8	231.8

자료: 한국무역협회통계(2005년)

**<표 3-2> 한국의 국가별 수출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	미국(376)	미국(312)	미국(328)	중국(351)	중국(497)	중국(619)
2	일본(205)	중국(182)	중국(237)	미국(342)	미국(428)	미국(413)
3	중국(184)	일본(165)	일본(151)	일본(173)	일본(217)	일본(240)
4	홍콩(107)	홍콩(94)	홍콩(101)	홍콩(146)	홍콩(181)	홍콩(155)
5	대만(803)	대만(58)	대만(66)	대만(704)	대만(98)	대만(108)

자료: 한국무역협회통계(2005)

1960년대부터 일본,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주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부터 중국과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수입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표 3-3>과 같이 2000년까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제3위에 머물러 있지만 2004년부터 2위로 부상하였다. 앞으로 그 순위가 초과할 것으로 전망 된다.

**<표 3-3> 한국의 국가별 수입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	일본(318)	일본(266)	일본(298)	일본(363)	일본(416)	일본(484)
2	미국(292)	미국(224)	미국(230)	미국(248)	중국(296)	중국(386)
3	중국(128)	중국(133)	중국(174)	중국(219)	미국(288)	미국(306)
4	사우디아라비아(96)	사우디아라비아(80)	사우디아라비아(75)	사우디아라비아(93)	사우디아라비아(118)	사우디아라비아(161)
5	호주(59)	호주(55)	호주(59)	독일(68)	독일(85)	아랍에미리트연합(100)

자료: 한국무역협회(한국수출입통계, 2005년)

## 2. 중국의 경제개황

중국은 1980년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9.6%에 달하는 고속성장을 이루었으며 특히 10.5계획(2001년-2005년)중에는 연평균 9.5%의 성장을 이루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중국이 경제적 위상이 대폭 강화 되었으며,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위기 영향과 미국과 일본의 경기침체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다 해도 8%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당시 중국은 대국으로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과시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한몫을 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20여년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1세기를 마지하여 정치, 군사 면에서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질서 개편에서 강력한 걸림돌이 됨으로써 미국의 패권주의에 강하게 서고 있다.

2005년 중국의 국내총생산액(GDP)은 182,321억 위안으로 9.9% 성장하여 세

계에서 4위를 차지하였는데, 이중 1차 산업은 22,718억 위안으로 6.3%, 2차 산업은 86,208억 위안으로 11.4%, 그리고 3차 산업은 73,395억 위안으로 9.6%의 성장세를 보였다.

2001년 말 WTO 가입과 더불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는 세계경제 무역 확대발전과 국제 무역 질서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 유치는 국제적 스포츠 행사의 차원을 넘어서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급증문제, 그 동안 발전과정에서 야기된 소득격차 문제 등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미국 주도의 일국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 축으로서의 그 국제적 위상도 강화될 것이다. 이제부터 중국은 단순한 시장 제공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국제경제 무역질서와 규범 수립에 주도적 일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표 3-4>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GDP(억위안)	95,800	102,398	116,694	136,515	182,231
경제상승률(%)	7.3	8.0	9.1	9.5	9.9
물가상승률(%)	0.7	-0.8	1.2	3.9	1.8
수출증가율(%)	5	22.3	34.6	35.4	28.4
무역수지(억달러)	226	304	255	320	1,019
외환보유고(억달러)	2,122	2,864	4,033	6,099	8,189
FDI(억불)	469	527	535	606	603

자료: 中國國家統計局, “統計公報”, ([www.stats.gov.cn](http://www.stats.gov.cn))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표3-4>와 같이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7%-9%의 성장을 유지하였으며 2%대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였다. 물가는 도시주민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도시지역의 소비재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3.9% 상승하였으나 공업제품의 공장도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수



급측면에서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sup>27)</sup> 2005년 수출입총액은 14,22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0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699억 달러 증가한 사상 최대치 흑자를 달성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액은 205년에는 실행기준 603억 달러로 조금 감소했지만, 외환 보유고는 8,189억 달러로 전년대비 2,090억 달러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수출입은 <표 3-5>와 같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무역수지는 2000년의 8.9% 감소에서 2002년에는 전년대비 35.1% 증가하고 2003년에는 16.1% 감소하였으나 2005년에는 다시 전년대비 218.4% 증가하여 1,019억 달러의 흑자를 이루었다.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경제의 심각한 타격으로 수출이 둔화되어 2002년에는 전년대비 22.3% 증가하였고 수입은 개혁개방 활성화와 내수시장 확대 등 원인으로 21.1% 증가하였다. 2005년도에는 큰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수출과 수입이 각각 28.4%, 17.6% 증가하였다.

**<표 3-5> 중국의 수출입통계**

(단위: 억 달러, 증가율%)

구 분	총 액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2000년	4,742(31.5)	2,942(27.8)	2,250(35.8)	241(-8.9)
2001년	5,097(7.5)	2,661(6.8)	2,436(8.8)	225(-2.8)
2002년	6,208(21.7)	3,256(22.3)	2,952(21.1)	304(35.1)
2003년	8,512(37.1)	4,384(34.6)	4,128(39.9)	255(-16.1)
2004년	11,547(35.7)	5,934(35.4)	5,614(36.0)	320(25.5)
2005년	14,221(23.2)	7,620(28.4)	6,601(17.6)	1,019(218.4)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統計公報” 2005.

개혁·개방 이후 무역의 빠른 증가와 함께 무역의존도 역시 급속하게 증가

27) 김위, 「중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4년 p.42

하였다. 중국의 높은 무역의존도는 대외개방의 정도를 나타냄과 동시에 경제 구조의 후진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대체로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소규모 경제에서는 무역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미국과 일본처럼 대규모경제에서는 무역의존도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중국은 대국이면서도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의 부가가치는 낮다. 그것은 중국의 기술개발 능력이 취약하여 원료, 기술 장비 등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면, 수출은 해외시장 수요와 국제 경쟁력이 낮아 가공에 의한 상품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출품목을 보면 개혁개방 이후 1차 산업 부문의 발전도 촉진되어 1차 산업제품의 수출도 완만한 증가세를 꾸준히 유지하였지만, 공업위주 정책의 결과는 주로 2차산업의 수출입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중국의 수출상품구조는 전통적인 경공업제품 중심에서 전기, 전자 등 기술이 필요한 제품 중심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2005년 기계, 전기전자제품이 수출총액의 56%인 42.67억 달러이며, 의류 및 방직제품과 같은 전통상품은 411.3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중국은 이미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복사기, 오토바이 등 가정용 전기제품 생산량이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중국에서 생산한 세계 1위 제품이 100여개에 이르렀다.

또 최근에 중국의 무역상품구조에 괄목할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수출입상품에 IT관련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2005년도 기준으로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이 1,723.2억 달러인데 비해 하이테크 기술 제품이 2,182.5억 달러로 앞서 있으며, 앞으로도 중국의 IT관련 품목의 수출입은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여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출입 상품 구조의 변화는 중국이 전통적인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제품에서 전기·전자산업을 중심으로 그리고 다시 첨단산업의 수출 국가로 변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sup>28)</sup>

중국의 무역이 증가하면서 중국은 세계 주요국가와의 교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2005년 중국은 주요 교역국의 대한 교역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05년 중국의 제 1의 시장은 미국이며 대 미국 수출액은 1,629억 달

28)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중국의 2005년도 대외무역 실적」, 2006년(www.koreaemb.or.kr)

러, 수입은 487억 달러로 1,14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무역에서 수입이 수출을 훨씬 초과하여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상당한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상당량의 중간재, 소비재, IT제품 등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특성은 한국기업의 대중국 제조업투자에 의해 유발된 것이다.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의 교역 다변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 교역국인 EU, 미국, 일본 등의 경기가 침체 상태 이지만 이들 국가로의 수출증가율이 각기 34.1%, 30.4%, 14.3%로 2004년 보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지역에 대한 교역도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3. 한·중 FTA 체결의 필요성

한 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가장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에 대상 국가의 선정기준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대상국가 선정기준은 상대국의 경제규모, 무역 및 투자시장 규모, 양국 산업간의 보완성 정도, 배후시장 규모, 상대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식, 기타 정치·사회적 변수 등을 들 수 있다.<sup>29)</sup> 경제적 이익의 측면으로는 상대국의 시장규모 및 산업구조의 보완과 경쟁관계,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 기술이전 및 경쟁력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정치·외교적 동기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은 지역안보, 외교적 필요성 및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것으로 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과 미국-요르단 자유무역협정을 예를 들 수 있으며, 중국이 ASEAN, 호주, 브라질, GCC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도 자원 확보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략적 동기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미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을 한국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타국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데, 비효율적인 산업에 투입되었던 자원이 효율적인 산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실업으로 인한 구조조

---

29) 박순찬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경제개방바로알기4」.2004, p.21

정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다수의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한 무역규범 및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소위 spaghetti bowl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sup>30)</sup>

경제학자들은 지역주의가 바람직한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일부학자는 지역주의를 세계적인 자유화의 디딤돌(building blocks)로 생각하는 데 반해, 다른 학자들은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에 걸림돌(stumbling blocks)이 된다고 보고 있다. 지역주의를 반대하는 학자들은 무역 블록의 회원국들이 자유화를 위한논의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sup>31)</sup>

그러나 Anne Krueger는 특혜무역협정 내에서의 강화된 통합은 대부분 추가적인 경제개방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특혜무역협정이 무역전환보다는 무역창출에 기여해왔음을 실증적 분석결과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sup>32)</sup> WTO보고서에서도 지역주의가 무역자유화에 보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인정하고 있어 이런 상대적인 낙관적 견해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는 2004년 말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2005년부터 2년간 중국의 국무원 발전연구중심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에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민간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중국 측에서 여러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바,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부처의 검토와 한국 국내적 합의과정을 거쳐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농산물 수출국은 한국에 역외국에 대한 농산물 관세인하 압력을 가할 것이고, 이는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는 중국 자동차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EU와 미국 같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 중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관세인하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러 부문에서 핵심적 위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한·중 자유무

---

30)남영숙외 3인,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와 주요 쟁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pp47-48

31) 이창재, 『한·중·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35.

32) Frabkel J., ed. The Region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p.273; Lee, Margaret C. "The US and EU-Undermin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Africa", 「News from the Nordic Africa Institute」, 2004, p.9

역협정은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같은 광역 자유무역협정으로 확대되거나 양국 중 1국과 역외국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혹은 양국에서의 관세인하로 나타나 세계적 무역자유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sup>33)</sup>

마지막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양국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국민후생과 GDP 성장에 긍정적인 거시경제적 효과를 미쳐 경제전반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양국은 모두 취약산업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한국의 농업부문 경제력은 상당히 낮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감한 산업의 관련자들이 한·중 자유무역협정체결에 저항할 것이며, 정치가들은 사회적·정치적 비용을 피하기 위해 이익 집단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취약산업의 지속적인 보호는 경제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야기하며, 이는 경제의 저성장과 고실업이라는 악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국은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내 취약부문 구조조정 촉진을 통해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일부 국가는 국내 경제개혁 보장을 지역 무역협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예컨대 멕시코의 경우 NAFTA에 참여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국내 경제개혁에 대한 차기 정권의 변경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었다.<sup>34)</sup>

양국의 취약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이익집단들의 국내 정치적 압력은 이 산업들에 대한 확고한 구조조정계획의 제시와 함께, 교육·직업훈련 및 보상제도 등 사회적 비용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 보완대책을 강구할 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이익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시장의 크기나 잠재성 등 시장규모에 있어 미국, 일본등과 함께 주요한 자유무역협정 대상국가라고 할 수 있다. 중국경제는 국영기업과 금융부문의 개혁, 악화되고 있는 소득분

---

33) Trilateral Joint Research, Research on the Free Trade Area among Japan, China and South Korea, NIRA, 2004. 참조

34) Perroni, C. and J. Whalley, "Possible Developing Country Impacts from a Competition Policy Negotiation". 『Developing and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Volume II』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1998, pp71-72.

배와 농촌문제의 해소 등 성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들을 안고 있으나, 향후 2020년까지 7%대의 고성장을 통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하면서 경제대국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잠재력이 가장 큰 내수시장에 대한 최우선 접근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중국은 산업·교역구조 측면에서 한국과 경제적인 부문이 늘러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국이라고 할 수 있다.<sup>35)</sup>

**<표3-6> 자유무역협정 대상국가 선정 기준**

경제적 이익	-시장규모 -FDI의 증가(수직적, 수평적) -무역장해요인(거리, 통상마찰, 관세 및 비관세장벽) -경쟁력 제고 -거래시장접근의 교두보
정치적 기준	-지역안보 및 외교적 필요성 -자원(석유 등)안정적 확보
전략적 기준	-leverage 활용 가능성
기타	-국내제도 개선 -대상국의 관심
경제적 비용	-구조조정비용(민감산업, 노동이동) -기회비용 -행정비용

자료: 박순천,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경제개방바로알기 4」, 2004, p21.

또한 중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장벽의 철폐 또는 완화에 따른 혜택을 들 수 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지속적인 관세인하를 추진하여 평균관세

35) 이창재 「2004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경제사회연구회, 2004.12, pp134-135.

율은 2001년 1월 15.3%에서 2004년 1월에는 10.4%로 인하하였다. 중국이 최근 매우 적극적인 진출의가능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도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의 하나이며 동아시아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에게 매우 유망한 자유무역협정대상국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잠재력이 큰 거대시장으로서의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논의가 본격화된다면,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레버리지 효과를<sup>36)</sup>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 2 절 한·중의 교역현황

### 1. 교역 현황

중국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1997년까지 경공업 위주의 수출중심 성장전략을 채택하였으나 수출이 부진하자 내수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다만 강력한 내수 부양책의 지속으로 인한 재정부담 등으로 무역흑자규모의 급감 방지와 내수부양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sup>37)</sup> 1997~1999년 기간 동안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위기 영향으로 중국경제의 성장률도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7~8%의 성장을 유지하였고, 2000년에는 GDP의 8%의 고성장을 이룩하였다. 장기적으로도 중국은 7~8%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절하로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이 있었으나 환율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아시아 금융위기의 확산을 방지하

---

36) 레버리지효과(leverage effect):타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시렛효과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100억 원의 자기자본으로 10억 원의 순익을 올리게 되면 자기자본이익률은 10%가 되지만, 자기자본 50억 원에 타인자본 50억 원을 도입하여 10억 원의 순익을 올리게 되면 자기자본이익률은 20%가 된다.

37) 황동언,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와 우리의 대응』, 현대경제연구원,1999,p.2.

여 아시아 경제의 안정판 역할을 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또한 2001년 11월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 그리고 해양엑스포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환경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시장개방의 확대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이로 인하여 외국 선진업체들의 진출에 따른 경쟁으로 산업구조가 되어 일부 국내 기업이 양극화 현상이 심화도태 될 전망이다. 한-중 양국간의 교역을 살펴보면, 양국간 산업보완성, 지리적 접근성, 문화적 유사성 등에 힘입어 성장은 지속되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제2위의 수입국. 제1위의 무역 흑자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위의 수출국이자. 제2위의 수입국이 있다. 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1992년 수교 이후 15배 이상 급속도로 증가하여 왔으며, 2005년 1천억 불의 교역규모를 달성하였다.<sup>38)</sup>

**<표3-7> 對중국 교역규모 추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교역규모	314.9억 불	411.5억 불	570.2억 불	793.5억 불	1005.7억 불
수출	181.9억 불 (1.4%)	237.5억 불 (30.6%)	351.1억 불 (47.8%)	497.6억 불 (41.8%)	619.2억 불 (24.2%)
수입	133.0억 불 (3.9%)	174.0억 불 (30.8%)	219.1억 불 (25.9%)	295.9억 불 (35.0%)	386.5억 불 (30.6%)
무역수지	48.9억 불	63.5억 불	132.0억 불	201.7억 불	232.7억 불

(자료: 외교통상부, 괄호안은 증가율)

한국은 중간재와 부품소재 등 고부가가치 위주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는 제조업 완제품 등 저부가 가치 위주의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중국과 수직적 분업관계를 이루고 있다.

38)최원기, 『중국의 한·중 FTA추진 배경과 한·중 FTA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12.



양국간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이 높고 한국의 대중 가공무역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면 한국의 대중수출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의 70%가 중간재와 부품소재에 집중되어 있고 일반소비재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표 3-8> 10대 수출입 품목**

(2005년 기준)

수출				수입			
품목	금액	증가율	비중	품목	금액	증가율	비중
반도체	71억 불	117.0 %	11.5 %	컴퓨터	33억 불	42.1%	8.5%
컴퓨터	51억 불	-5.1%	8.2%	의류	22억 불	4.5%	5.75%
광학기기	38억 불	113.3	6.1%	철강판	20억 불	106.3%	5.2%
무선통신기기	37억 불	%	6.0%	반도체	19억 불	36.7%	4.9%
합성수지	37억 불	5.8%	6.0%	석탄	15억 불	-1.8%	3.9%
철강판	34억 불	19.8%	5.5%	전자응용기기	15억 불	35.2%	3.9%
석유제품	33억 불	11.0%	5.3%	알루미늄	11억 불	17.15	2.8%
자동차부품	27억 불	23.0%	4.4%	정밀화학원료	10억 불	35.55	2.6%
석유화학합성원료	25억 불	55.1%	4.0%	정전기기	9억 불	32.75	2.3%
석유화학중간원료	16억 불	36.3%	2.6%	무선통신기기	8억 불	47.75	2.1%
<소계>	369억 불	15.4%	59.5 %	<소계>	162억 불		42.0%
총계	620억 불		100%	총계	386억 불		100%

자료 : 외교통상부.2006.

중국의 무역에 있어 한국은 일본, 미국에 이어 3대 파트너(홍콩, 대만 제외)이며, 중국의 수출에 있어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3대 수출시장이며, 수입에서도 일본에 이어 2위이다.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1993년 흑자 전환 후 14년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는 중국의 한

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비롯한 한-중 통상현안의 배경이 되고 있다.<sup>39)</sup>

그리고 한-중 양국의 수출경쟁력을 비교해보면 중국의 수출은 규모면에서 1975년까지는 한국보다 우위에 있었다. 1975년 중국의 수출액은 72.6억 달러였으며 한국 수출액은 50.8억 달러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두 나라의 정치적 격변은 각각 자국의 경제를 침체시킴으로써 양국 수출 순위는 역전과 재역전을 반복했다. 그 후 한국의 수출은 1978년까지 연평균 35.8%의 급속한 증가를 보였고 중국은 10.3%의 증가를 보여 양국간의 격차는 약 30억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이후 1980-1982년까지 중국이 수출규모에서 한국에 대한 다시 우위를 점했지만 1983년부터 다시 한국의 수출액이 중국을 앞서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중국은 계속적인 무역관리제도와 관행 및 수출지원 정책에 의한 무역활성화와 지원을 바탕으로 수출경쟁 향상에 성공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선진국의 통상압력과 경기침체에 직면하여 같은 기간 중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6%에 그쳤다. 이에 따라 1992년의 중국의 수출액은 850억은 달러에 달한 반면, 한국의 수출액은 766억 달러에 머물러 양국간 수출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중국에 뒤진 한국의 수출이 과거와 같이 다시 중국의 수출규모를 앞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한국의 경우에 수출경쟁력 유지의 주요 요인이었던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비교우위를 지킬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소진되었으므로, 이제는 기술우위의 확보가 요청되고 있으나, 이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 비해서 중국은 저가의 노동력, 규모의 경제력을 지나고 있다. 지역적으로 볼 때에도 아시아지역에서 일본, 중동 및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국이 시장 점유율은 훨씬 크다.

---

39) 중국 경제는 개혁, 개방정책의 추진 이후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모든 물질 생산 분야의 총계를 나타내 주는 사회총생산액은 1979년부터 1992년까지 연평균 11.1%의 실질성장률을 기록하여, 1992년부터 1998년까지의 7.9%에 비해3.2%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총생산액에서 중간재 투입과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등을 제외한 순재화 생산액을 나타내 주는 국민수입 역시 대외개방 이후 8.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국가통계국페이지([www.stats.gov.cn](http://www.stats.gov.cn))참조]

## 2. 투자 현황

중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다. 중국의 WTO가입 이후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02년부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2005년 말 현재 약215억 불로 전체 해외 직접투자에서 24%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은 과거에 특별한 제약 없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최근 외자기업의 상대적 중요성 감소에 따라 자국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업만 유치하고자하는 선별적 투자유치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

**<표3-9>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 규모와 대중국 투자 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누계
전체	61억 불	64억 불	63억 불	59억 불	81억 불	92억 불	881억 불
대중	10억 불	10억 불	21억 불	28억 불	37억 불	36억 불	215억 불
비중	16.4%	15.6%	33.3%	47.5%	45.7%	39.1%	24.4%

자료: 외교통상부. 누계는 1968-2005 기간

중국기업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90US대 중반이후 금융기관, 무역, IT 업종을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중국기업의 한국제조기업 매입이 늘어나 2004년에는 중국의 대한국 투자의 비중이 6.9%에 달했다.

최근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M&A 형태의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가장 큰 주목을 끈 것은 2003년 중국의 京東方(BOE) 그룹의 하이닉스 반도체 TFT LCD 사업부 인수와 2004년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SAIC)의 쌍용 자동차의 51%의 지분인수이다. 이러한 최근의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한국의 첨단기술 습득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익성 악화로 구조조정 대상이 된 기업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최근 중국정

부는 해외진출 즉 소위 쩌우추취(“走出去”) 전략을 실시하여 자국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해외시장개발, 해외자원개발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 따라서 향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거대한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2004년 7월 <해외투자 산업 지도 목록>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 장려업종은 제조업 분야에서 자동차 등 운수교통설비 제조, 화공원료 제조, 통신설비, 컴퓨터 및 전자설비 제조이며, 서비스업에서는 무역, 소매, R&D, 건축, 운수교통 등이 포함되어있다.

중국의 한국 직접투자는 2005년 현재, 17.6억 불로 전체 해외의 한국 직접투자의 약 1.5%로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하지만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풍부한 외환보유를 기반으로 기술습득, 한국시장 개척 등의 목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3-10> 전체 해외의 對한국투자 규모와 중국의 투자 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누계
전체	152억 불	113억 불	91억 불	65억 불	128억 불	116억 불	1,115억 불
중국	0.8억 불	0.7억 불	2.5억 불	0.5억 불	11.7억 불	0.7억 불	17.6억 불
비중	0.5%	0.6%	2.7%	0.8%	9.1%	0.6%	1.5%

자료: 외교통상부, 누계는 1962~2005년 기간

### 제 3 절 한·중 FTA의 기대 효과

#### 1. 경제적 영향

자유무역협정의 당사국은 관세와 무역장벽의 제거를 통하여 역내무역

의 자유화를 이룩하고 무역을 활성화시킨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무역장벽의 제거는 무역의 변동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역내무역 변동의 긍정적인 효과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로 나누어진다.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는 모두 역외무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의 배타성과 관련되므로 역외국에게는 부정적인 효과가 될 것이다. 한 . 중 FTA 추진시 17조 9천억 원(2.3%)의 GDP 증가가 예상된다. 제조업 분야는 26억불의 무역흑자 확대가 된다. 농림수산물의 경우 90%관세감축을 가정하면 수입액이 2004년 현재 21억 불에서 약 123억 불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한 . 중 FTA에 따른 수입 증가액은 100억 불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sup>40)</sup>이 중 대부분은 농축산물 분야에서 발생하며 수산물 분야는 1억 불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3-11> 한 . 중 FTA의 경제적 효과**

구분	FTA 체결전 (2004)	FTA 체결후 금액	
		금액	변동액
GDP	778조 4천억 원	796조 3천억 원	↑17조 9천억 원(92.30%)
1인당 국민소득	14,162 불(1,621만 원)	14,488 불(1,654만 원)	↑326 불(33만원)
산업별 무역수 지	제조업	233억 불	249억 불 ↑26억 불(11.7%)
	농림수 산업	△21억 불	△123억 불 ↓102억 불(486%)

자료: 외교통상부, 농산물은 90% 관세감축, 여타 품목은 관세 완전철폐 및 자본축적 가정

(1) 단기적 영향

한국과 중국의 교역관계는 한국이 중국으로 중간재와 부품을 수출하고, 중

4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결과 2004 [www.kiep.go.kr](http://www.kiep.go.kr) 참고

국은 한국에 완제품과 농수산품을 수출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한·중 FTA가 추진될 경우 단기적 효과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대부분 최종 소비 제품인 중국의 제조업 완제품과 농산품이 대거 유입될 경우,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비용 즉 생활비가 낮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며, 중국의 관세 장벽이 사라지면서 한국의 대중 중간재, 부품 수출이 촉진돼 한국기업의 매출 및 수익이 개선되는 긍정적 무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값싼 중국의 제조업 완제품과 농산품이 한국의 중소기업과 농산품의 생산을 대체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여, 중소기업과 농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중FTA로 제조업의 중국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 국내의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의 실업을 또한 증가할 수 있다.

## (2) 장기적 영향

한·중 FTA의 장기적인 동태적 효과는 양국이 FTA로 발생하는 기술혁신 및 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한·중FTA시 단기적인 무역확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이 한·중FTA를 통해 기술혁신 및 생산성 증대효과를 기대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즉,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혁신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해 한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대한국 수출의 증가로 무역확대 효과의 삭감 및 대중 무역적자의 확대 등 한국경제에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중 FTA는 한·미 FTA와 같은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FTA와 달리, 중국이 투자, 서비스 등의 자유화에 매우 소극적이므로, 제조업 부문의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상품교역의 무역자유화 위주의 낮은 수준의 FTA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중FTA가 낮은 수준으로 체결된다면, 한국은 제조업 부문의 관세인하이외에 한·미 FTA와 같은 경제제도의 선진화 및 기술학습, 혁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의 동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단기적 무역효과로 인한 호황으로 한국기업들의 혁신의지와 인센티브가 약화 될 수 있다. 중국

에게는 한국이 기술적으로 격차 해소(catch-up)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한·중 FTA는 한국산재화 및 투자 확대에 의해 학습 기회가 증가되어, 한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FTA로 한국기업의 생산기지가 중국으로 대거 이동할 경우, 중국의 기술 학습 및 혁신을 통한 생산력 제고의 기회가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동태적 기술혁신 및 학습에 성공하면, 중국기업의 기술능력 향상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이 위축되고 장기적으로는 FTA로 인한 무역효과가 잠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중 FTA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무역확대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혁신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한 기술격차 해소의 가속화 및 대한국 수출의 증가로 무역효과의 삭감 등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2. 정치·외교적 영향**

### **(1) 경제협력의 제도화**

한국과 중국의 교역 및 투자관계는 수교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해왔으며, 현재 한국의 대외교역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20%에 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의 지속적 증가는 한·중 간 통상마찰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으며, 중국은 때로는 반덤핑조치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해 왔다. 이러한 양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급격히 증가 및 이에 따른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중 FTA는 잠재력이 가장 큰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최우선 접근의 확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국간 경제협력의 제도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2) 안보관계에 대한 영향**

FTA와 같은 제도적 경제협력의 안보적 외부효과(security externalities)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것이며, FTA가 단기적 관점에서 안보동맹을 강화시킨다든지, 안보이슈의 해결에 기여하리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양국의 한·중 FTA의 추진의 주요 동기는 안보적 목적보다는 경제적 이유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단기적인 안보적 외부효과는 미미하고, 양국의 안보관계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한·중 FTA는 경제적 관계의 긴밀화와 유대강화에 따른 양국 간 공동체 의식의 제고에 기여 할 수 있으며, 경제외적 이슈에서의 양국의 협력관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국 간 FTA의 안보적 효과를 과대평가 할 필요는 없다.

### (3) 남북관계에 대한 영향

한·중 FTA의 체결은 남북관계 및 한·중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 북한, 중국 3자간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가 높아질 것이며, 한·중 FTA를 통해 3국 간 교류와 협력이 증진된다면, 북한의 남한에 대한 신뢰기반이 확대될 것이다.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 바람직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북한이 한·중 FTA를 한·중 간 경제적 측면에서의 수교로 인식하여 북한의 고립감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이미 한국과 중국 간 대북정책에 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한국이 북한을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될 수 있다. 중국은 한·중 FTA 추진시 개성공단 문제에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달리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협조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성공단 문제를 받아들이는 대신 다른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

### (4) 국내정치적 영향

기본적으로 한·중 FTA는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중 FTA 추진시 그 추진 의도에 대한 논리적 비약에 근거한 국내 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만약, 한·중 FTA의 추진을 둘러싼 국내 정치적 갈등이 야기되어, 한·중 및 한·미관계에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중 FTA의 추진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동북공정문제 및 최근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강화에 따라 북한을 중국이 경제적으로 예측시키려 한다는 논리적 비약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중 FTA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차원에서 중국이 남북한 모두를 예측시키려 한다는 논리적 비약에 근거한 정치적 해석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 (5)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영향

한·중 FTA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 FTA를 촉진하는 데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동북아 지역협력 촉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첫째, 동북아 지역협력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한·중·일 간 역사문제와 민주주의 및 지역 내의 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갈등과 불신이며, 이러한 정치적 갈등과 그로 인한 외교안보적 불신은 역내국가 간 FTA 체결로 해소될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다. 둘째, 한·중 FTA가 추진될 경우 동아시아 내의 양자 간 FTA 경쟁 가속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FTA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다는 면에서 동아시아 FTA 허브를 지향하는 한국의 FTA 전략 추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양자 FTA 확산은 다양한 원산지 규정의 혼재로 인해 통관비용의 등의 경제적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소위,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를 낳을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 된다면, 이는 역내 지역통합 촉진의 초석(building block)이 아니라 걸림돌(stumbling block)로 작용할 수도 있다. 셋째, 동아시아 역내국가들 간의 지역협력 움직임에 민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한·중 FTA가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단기간 내에 촉진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중·일은 대부분 미국과 비대칭적 교역 및 투자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아세안과 같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도 수출, 투자, 기술을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 수출시장에서의 결과에 따라 경제성장 추이가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역내 주도국이 개방적 무역정책을 통해 역내의 잉여수출을 흡수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요원한 상황은 지역 경제통합의 단기적 전망을 더욱더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잠재적 비토세력인 미국의 반대를 잠재울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중 FTA가 역내 지역협력의 촉매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한·중 FTA가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 조건의 성숙은 단기간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이 양자 간 FTA를 자국의 경제적, 지역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외교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중단기적으로는 기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3. 관세에 대한 영향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업분야는 제조업 보다 교역에 대한 규제조치가 더 많기 때문에 생산단가에 근거한 가격수준이 미치는 영향이 제조업에 비해 덜한 편이다. 농산물의 경우, 일부 교역은 국영무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위생검역 등에 의한 수입제한조치도 많이 적용된다. 한편 한국의 경우, 한국 농업분야가 FTA추진에 가장 민감하고, 농업계가 중국산 농산물 수입증가를 우려하고 있어 극히 민감한 농업품목에 대한 예외인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한국 모두 곡물류에 대해서는 TRQ를 부여하고, 쿼터 외 물량에 대한 관세율이 워낙 차이가 나므로 어느 관세율은 대상으로 선택할 것인가도 용이하지 않다. TRQ하의 자율관세를 가정하게 되면, 농업에 대한 영향이 너무 축소될 수 있는 반면, 쿼터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율은 사실상 수입저지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고율관세는

농업에 대한 영향이 과대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GTAP 관세율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도 실제 협상에서 타결될 개방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FTA 체결 당사국들은 역내 관세의 완전철폐를 그 목표로 위하지만, 자국내 상대적인 취약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대한 축소하기위해 관세 철폐에 있어서 예외규정을 설정한다. 관세의 완전 철폐시 예상 효과를 먼저 알아보면, 한국과 중국이 관세를 완전 철폐 할 경우, 한국의 GDP는 2.53%p까지 추가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경우는 0.7%p 추가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를 체결함에 있어 그 이후의 파급효과로 일부 산업들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 농업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그 파급효과로 농업 산업 내에서 생산이 11.60~12.04%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수송 장비, 전기전자, 기계장비의 생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하여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가공식품, 설탕, 차량 및 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이 될 전망이다. <표 3-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출산물의 생산규모가 10.06~11.20%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산물 분야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생산에 필요한 경작지가 휴유지를 목축용으로 전환 시켜서 보다 많은 목축지가 생겨남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이다. 제조업종중에서는 피혁, 기타 수송 장비가 한국과의 FTA로 가장 이익을 볼 수 있는 산업이 될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기술적우위에서 오늘 결과로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업종이다.

**<표 3-12> 관세의 완전철폐에 영향**

	산업별 생산				한·중 교역량			
	한국		중국		대(對)중 수출		대(對)한 수출	
	관세	자본	관세	자본	관세	자본	관세	자본
곡물류	-12.04	-11.60	6.26	7.01	10	9	7927	7969
축산물	10.06	11.20	-0.22	0.47	8	8	23	31
채소과일류	-0.01	0.23	0.39	0.86	1	1	288	289
기타농산물	7.60	8.35	-0.51	0.38	1	1	1916	1910
가공식품	29.07	30.50	0.00	0.97	181	182	1442	1472

설탕	19.79	21.47	-3.46	-3.4	10	10	0	0
임산물	0.53	2.13	-1.18	0.1	0	0	1	1
수산물	1.46	2.09	0.56	0.89	9	9	95	98
광물	-2.43	-1.81	-1.06	-0.19	0	0	114	127
석유류	0.50	2.08	-0.66	0.64	160	189	82	93
섬유	-0.27	1.32	-2.50	-0.72	659	731	388	448
의류	-6.36	-4.75	5.18	7.19	-23	-15	411	413
피혁제품	-7.65	-6.22	5.85	7.23	-107	-56	177	173
목제가구	-3.08	-1.07	2.37	4.12	10	13	74	75
종이·인쇄출판	0.37	2.19	-1.68	0.01	49	53	9	12
석유화학	1.77	3.85	-0.38	1.29	1280	1503	275	279
철강·금속제품	2.32	4.91	-2.62	-0.56	939	919	73	173
비철금속	-1.87	0.43	0.05	1.74	80	91	149	152
차량 및 부품	3.28	5.82	-2.29	-0.02	295	284	31	37
기타 수송 장비	-9.88	-7.09	6.31	8.75	6	7	34	35
전기전자	-5.44	-3.61	-3.01	-0.72	1232	1370	679	679
기계장비	-3.89	-1.18	-2.08	-0.05	1071	1157	857	997
기타 제조업	-1.47	0.31	1.77	4.08	180	188	152	159
총 계					6051	6660	15202	15622

자료 : 남영숙등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와 주요 쟁점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p. 113.

한·중 FTA로 예상되는 양국간의 교역규모는 200억 달러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60~67억 달러 증가하고, 중국의 대한국 수출이 152~156억 달러 증가함으로써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악화될 전망이나 세계 무역수지에 있어서는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는 한국이 기타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던 것을 대체함으로써 중국 이외의 무역수지 적자국으로부터 무역수지를 개선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수입증가분의 대부분은 가격경쟁력이 높은 농산물(특히 곡물류)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전통적인 농업생산국인 한국 내에서의 농

업분야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의 FTA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농산물 시장에 대한 협상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4. 산업별 생산에 대한 영향

전반적으로 볼 때, 설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산업별 생산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산업의 경우, 관세의 25%만이 자유화됨으로써 산업별 생산규모가 그다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유화수준이 높을 생산규모가 13%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경우, 제3국 수입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과일채소의 경우 영향이 클 수 있다. 한편, 중국산 곡물의 무관세화로 수입이 증가할 경우, 한국의 가공식품, 축산업 등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곡물에 투입되었던 생산요소가 시간을 두고 다른 산업으로 재배치됨으로써 이들 재배치된 산업의 생산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표 3-13> 한국의 산업에 대한 영향**

(단위:%p)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기초산업	-1.87	-5.21	-12.47
가공식품	0.30	4.33	12.37
광물자원	0.43	0.18	-0.49
섬유류	32.87	34.88	37.35
화학	9.86	9.99	9.91
금속철강	3.63	3.05	1.78
수송 장비	-4.69	-4.36	-3.18
전기 전자	7.08	6.28	4.58
기계류	3.89	3.09	1.57
기타제조업	5.11	5.47	5.90

서비스	-2.55	-2.26	-1.57
-----	-------	-------	-------

자료: 정인교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2004.p125

중국의 경우, 다수 산업이 한국과의 FTA로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에 비해 생산증가율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산업에 대한 자유화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FTA의 가장 큰 수혜업종은 전기전자가 될 전망이다, 증가율은 3~4%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공식품, 금속철강, 기계류, 기타제조업 등은 기초산업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은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작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 등 기초산업 생산증가를 위해 제조업에 고용되었던 자원이 기초산업으로 재배치되기 때문이다.<sup>41)</sup>

### <표3-14> 중국의 산업에 대한 영향

(단위:%p)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기초산업	0.55	1.11	204
가공식품	0.65	0.42	0.02
광물자원	0.26	0.26	0.26
섬유류	0.22	0.05	0.22
화공	0.39	0.39	0.39
금속철강	0.13	0.09	0.02
수송 장비	0.40	0.01	0.69
전기 전자	3.37	3.47	3.63
기계류	0.35	0.30	0.21
기타제조업	0.29	0.22	0.11
서비스	0.04	0.01	0.36

자료 : 정인교,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2004.p126

41) 정인교,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p126

화공과 석유류 생산이 위축되는 것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한국과 중국의 수송 장비 생산이 동시에 감소하는 배경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보면, 수송 장비에 대해 중국이 한국에 비해 고관세를 부과하므로 한국의 생산은 확대되고 중국은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5. 품목별 교역에 대한 영향

중국과의 FTA 체결시 한국의 대중 수출은 326~333억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76~93억 달러 증가함으로써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40~250억 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중국과의 FTA체결로 한국은 중국에 대해 55~65억 달러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대중국 수입은 58~142억 달러 증가함으로써 대중국 무역수지가 3.77억 달러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3-15>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

(단위: 백만 달러)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대중국 수출	32,620	32,945	33,319
대중국 수입	7,583	8,481	9,279
대중국 무역수지	25,037	24,464	24,041

자료: 정인교,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2004.P126

예상하는 바와 같이, 농업개방 여부는 중국의 대한국 수출실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곡물류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에 중국은 한국에 대해 최고 70억 달러어치의 농산물을 추가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농산물, 가공식품도 상당 규모의 대한국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농산물 수출은 무려 103억 달러로 대한국 총 수출증가 예상액 142

억 달러의 73%가 농산물 수출로 채워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한·중 FTA가 추진되더라도 한국으로서는 농업의 전면개방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임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농업에 비해 제조업의 대한국 수출은 대체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해 보면 다소 부정적으로 보이는 면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한·중 FTA는 양국 모두에게 상당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한국과 중국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상대국에게 긴밀한 교역대상국이므로 보다 수준 높은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한·중 FTA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업개방문제는 한·중 FTA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FTA 체결시 중소기업 제조업 종에 대한 피해도 우려된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국으로부터 수입증가보다는 국내 생산자원이 대중국 수출산업으로 재배치됨으로써 국내 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중소기업에 근무할 생산인력이 줄어들게 되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 추진 전에 이들 산업의 구조조정 지원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며 대량 실업이라는 사태를 고려하여 FTA 체결 이전에 FTA체결의 여파로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제 IV 장 한중 FTA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제 1 절 한중 FTA의 문제점

한·중 FTA 체결은 무역 및 투자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역내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효과도 수반한다. FTA 체결의 영향으로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보더라도 농업부문처럼 업종에 따라 손실을 입는 분야도 있을 수 있다.

FTA 체결 자체가 체약국간 무역자유화를 의미하므로 경제력이 취약한 기존 국내 생산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물론 한·중 양국은 그나마 어느 정도의 종속적이 아닌 대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제할 수 있다고 본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경제적 조건의 차이

한 지역에서 경제권을 형성하거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지리적인 인접성, 정치제도 및 정책방향의 일치성, 국가의 규모, 인구의 크기, 경제발전 수준 및 경제력의 유사성이 존재했을 때 바람직하다고 경제통합의 일반적 모형에서 설명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공동경제권을 형성하기에는 국가의 규모, 경제발전의 정도, 인구분포 등의 격차가 너무 크며,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양국 국가간의 경제발전 수준 및 경제력에 심각한 격차가 존재함으로써 경제권 형성의 이익이 역내 기술이 앞선 나라로 집중되거나 역내 경제교류가 비대칭적 의존관계를 유발시킬 위험이 있다. 실제로 공업부문에서의 발전 및 경제력의 격차가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역내 국제간 생산구조 및 시장수요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역내국가간의 경제력 격차가 산업구조의 이질성에 기인한다면 상호보완적 결합 메카니즘을 통해 동태적으로 개선 할 수 있으나, 동일산업 내에서 구조적 경제력의 격차가 커서, 역내 국가간 생산구조 및 시장수요에 있어서 비대칭적 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상의 비대칭성이 지역규모의 상호의존적 경제권 형성의 주요한 기능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적이고 국지적인 경제권 형성이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 **2 산업발전의 고착화**

양국간의 산업발전의 격차로 인한 산업발전 고착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현시점에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에 비해 기술적으로 뒤쳐진 저차원산업에 대한 고착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무역불균형과 함께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무역수지의 편중이 거론되어 한국의 경우 무역수지가 균형적으로 보이나 중국의 경우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각국 산업에 대한 체질변화를 발생시켜 오히려 산업기술에 대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동태적 효과로 볼 때 외국인 기업들의 역내진입과 역내교역 증가로 인하여 이에 상응하는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다.

## **3. 경제체제의 이질성**

사회주의 계획경제권과 자본주의 시장경제권간의 경제협력체 형성은 양 체제가 추구하는 경제이념 및 경제운영원리의 근본적 차이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장경제권의 대외무역은 이윤추구를 목

적으로 민간 기업에 의해 실행되며, 계획경제권의 대외 무역은 국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자조달의 일환으로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따라서 양자간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결속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시장경제권의 경제활동은 시장 메카니즘이 작용하고 이윤이 확보되는 자생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으며, 국가간의 경제권 형성은 이러한 경제활동의 영역을 넓혀주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중앙 계획형 계획경제권에서는 이러한 확산이 인위적으로 통제됨으로써 경제권 형성의 근본취지가 무산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직까지 한·중 양국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경제운영체제의 차이는 한·중 지역경제권 구성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내두되고 있다.

#### 4. 한·중 양국간 무역불균형 심화

한·중 양국간 무역은 종속적인 경제구조와·기술협력의 부진 등으로 구조적 불균형 상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경공업부문의 공업화 초기 단계에서 중간재를 한국에서 수입함에 따른 대한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중국은 순차적으로 동일한 산업발전 패턴을 보이면서 공업화를 추진 해왔다. 한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섬유산업에서, 1980년대 이후 전자, 자동차 등을 육성하였고, 중국은 1980년대 섬유산업에서, 1990년대 전자, 자동차산업을 육성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기술발전 속도가 완만해지고 한국의 산업구조조정이 지체되면서 세계시장에서 한·중의 경쟁관계가 심화되는 상태가 되었다. 21세기 세계경제는 정보화, 서비스화 시대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데 반하여 한·중의 산업은 전통적 제조업에 치중하고 있어,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양국 모두가 중장기적으로 교역조건 악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들 양국의 자유무역협정 성사에는 이 같은 구조적 무역불균형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 제 2 절 한 중 FTA의 대응방안

### 1. 정부의 대응방안

#### (1)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WTO는 지역협정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불명확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지역주의는 역외차별적인 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수출시장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지역 경제통합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대책과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정책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지역무역협정의 비회원국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지역무역협정관련 WTO의 규범을 강화하거나, 한국도 주요 교역국과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WTO는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을 방지하고, 역외국에 대한 차별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허용기준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자간 기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범람하는 지역주의로부터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sup>42)</sup>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느슨한 형태의 경제협력체인 APEC이 있으나, 현재의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원칙 하에서는 FTA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고, 개방적 지역주의 특성으로 인해 회원국들의 APEC 차원의 자유화 추진에 대한 의지도 낮다. 따라서 APEC을 통한 지역주의 대응방안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협소한 국토와 빈약한 부존자원이라는 불리한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발판을 수출중대와 해외시장의 개척에 둘 수밖에 없었으며, 세계교역 및 경제의 상호의존성의 심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21세기에 성장을 지속시키는 무역, 해외투자 등

---

42) 전의천,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경영경제연구,] 제23호 제2호 조선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01.2 p223

대외 부문에 더욱 더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sup>43)</sup>

그러나, 국가간·지역간 경제통합이 심화·확산됨에 따라 한국의 수출시장 여건은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FTA 체제하의 경제운영은 우리 경제가 시장개방과 경쟁에 익숙해지고 경쟁적 체질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무역자유화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경제 전반에 걸친 큰 충격과 무역수지의 적자가 예상된다.<sup>44)</sup>

한국은 FTA 체결에 대해 원칙적으로 WTO를 통해 지역주의화(regionalism)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규범을 제정하도록 노력하면서, 동시에 지역주의화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FTA의 체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양면 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sup>45)</sup> 따라서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안은 적절한 FTA 대상 국가를 선정하여 FTA를 체결함으로써 가능한 전 분야에 걸친 자유화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한국의 불합리한 경제제도와 각종 관행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사회적·정치적 상호이해 관계 개선

국제 협력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각국별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정에는 많은 부문에서의 상호 교류가 필요할 것이다. 한·중 지역의 경우 지난 40여년간 정치적 대립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과거사 문제와 영토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등으로 상호간의 반감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정치적 상호이해 및 협력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에서의 경제통합

---

43) 정인교,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우리의 대응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제2권 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12, p.13.

44) 김남두, 『자유무역화와 경제구조 개선의 후생효과 추정』, 국제경제연구 제6권 제1호, 2002.4, p.79

45) 김석균, 『FTA의 세계적인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제12권 제4호 1999.8, p.493.

이란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가지기 어렵다. 중국의 경우 한국 주력 산업의 중요한 시장이면서 해외투자 전략의 중심지역이며 경합관계보다 보완관계가 강해 FTA의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진다. 더욱이 중국은 한국보다도 관세율이 높고 비관세장벽도 높아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산업 부문에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중국이 FTA 정책에 단기간 내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한국이 중국에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대중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산업 부문들은 현재 중국이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전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차별화를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 및 본사를 유치하고 동시에 제조업을 지원할 물류, 금융, 정보 서비스업 등의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FTA 추진 전에 먼저 국내경제 및 산업 환경의 점검을 통해 FTA 협상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의 경제 및 산업기반이 취약할 때, FTA의 추진은 오히려 국내경제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크기 때문에 먼저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의 완화,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 자본시장의 안정성 확보,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의 성공 등을 통해 대외 경쟁력이 갖추어진 후에 FTA의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46)</sup>

### (3) 산업구조 개선 및 기술협력 강화

한·중 양국간의 경쟁적 비교우위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경쟁하고 있는 분야, 예를 들면 자동차, 수송기계, 전기전자, 일부 기계 산업 등에 있어서 각국간의 협력 메커니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협력분야의 선정 원칙으로 FTA의 동태적 이득이 최대화되도록 양국간 산업 내 교역 가능성이 크고, 규모의 경제 이익이 크며, 무역에 동반되는 투자가 큰 산업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sup>47)</sup> FTA의 동태적 이득은 규모의 경제이익,

---

46) 나형근, 『자유무역협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경련 국제본부 미주협력팀 2000.11.21, p5.

경제심화에 따른 효율 증대, 투자가 양국 요소로서 특히 경쟁 심화가 생존을 건 경쟁으로 발전하지 않고 공생의 협력 체제로 유도되도록 양국 기업간의 산업내 교역의 여지가 충분해야 할 것이다. 각국간 경쟁적 비교우위분야에서 전략적 제휴, 과잉투자조정, 기술제휴 및 이전 촉진, 중소기업협력, 공정분업 및 상품 차별화 등 다양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산업 내 교역을 촉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sup>48)</sup>

#### (4) 통화·금융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한·중 경제 협력 관계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현안인 금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통화·금융 면에서 보면 한·중 관계의 긴밀화는 더욱 중요하다.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가 일어난 원인은 아시아국이 하나같이 자국의 통화가치를 미 달러에만 고정하는 외환정책을 추진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명목실효환율 변동 폭은 대 달러환율 변동 폭보다 크고 실질환율은 더욱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미 달러 외에 유로화를 포함한 통화 바스켓을 고정시키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방식에서는 원화 환율이 유로화를 포함한 기타통화 미 달러환율의 변동에도 조정되어짐에 따라 원 환율을 안정시키게 된다.

한·중 상품·서비스 시장의 통합화에 맞추어 금융·자본 시장의 통합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한·중 상호 연대에 의해 각국 정부는 자국의 금융시스템을 세계 표준에 맞추는 노력을 전재하고 있으며, 전술한 금융서비스 자유화 교섭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할 것이다. 자국의 금융자본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도록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양국간 협력의 결실

---

47) 상대국들과의 개별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상대국의 입장과 국내 여건에 따라 협정 내용을 다양화하고, 상대국과 국내 민간 부문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야 한다. 상호 비교우위를 인정하는 양보와 필요한데, 독일과 프랑스가 농업-공산품 분야의 대타협을 토대로 하여 유럽 통합에 이른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얻을 것과 양보할 것을 명확히 하여 일방적인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뚜렷한 효과가 없는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다.

4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21세기 한·일 경제관계연구계획 보고서」, 2000.5, p34

이 맺어질 것이다.

한·중 각국의 협력관계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현안인 금융 문제를 극복하는 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여 진다.

#### (5) IT 분야의 협력 강화

최근 들어 전통산업 부문의 한·중 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활발해지고 있다. 기초기술의 공동개발과 합작사업 추진 및 IT화 대응 등 1990년대와는 다른 패턴의 전략적 제휴와 협력방식이 대두되었다.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의 가장 큰 의의는 정보화·디지털 시대공동 대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각국의 정보화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구미에 비해 뒤진 정보화에서 동북아 양국이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 기술 개발로 연구 개발비 부담을 줄이고 표준화로 기술 효율을 극대화하여 정보화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sup>49)</sup>

IT 기기의 생산과 정보통신 분야의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기업간의 공동 전자 상거래 구축을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한국 인터넷 산업이 중국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중국 진출 및 중국기업과 제휴, 자본 조달 등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자본이 중국의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한국의 유무선 인터넷 분야 진출 등을 위한 벤처 캐피탈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반면 반도체를 제외한 대만 IT 하드웨어 생산기업의 중국내 생산이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듯 하다. 2002년 1/4분기 대만의 IT 하드웨어 기업의 매출액 중 49.6%가 중국에서 생산되며, 이는 대만내 생산비율 38.4%보다 높은 것이다. 대만 IT기업의 중국내 생산비율은 1996년 16.8%에서 3년 후인 1999년에는 33.2%로, 2002년 1/4분기에는 거의 50%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국은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는 단계에 있으나, 중국 등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경제공동체 형성 등을 통하여 지식기반산업을 활동할 수 있는 지리적

---

49) 윤종언 『한·중·일 산업협력의 방안』, 「디지털 시대, 한·중·일 산업협력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0.11, p75-76.



인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지역경제통합을 통한 경제·지리적인 기반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과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기반 경제의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아시아의 금융 위기도 지식기반경제에 기초한 산업기반의 부재 또는 지식경제기반에 바탕을 둔 기업이 존재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경제·지리적인 영역의 부재가 한 요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지식기반산업의 기반을 확충해 가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일로 판단된다. 이는 지식기반산업의 발전 단계에서 경제공동체 형성 등을 통한 경제·지리적인 영역의 확충이 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 (6) FTA의 협력 시스템 정비

한·중간 원활한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상호 경제 및 산업분야를 포함하여 다방면에서 양국간 정책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협력을 어떠한 채널을 통해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한·중 자유무역은 아직 양국간 협의된 운영원칙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또는 ASEAN으로부터의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자유무역의 운용체계는 일차적으로는 APEC의 운용체계에서와 같이 정상회의, 분야별 각료회의, 다자간 무역체제와 조화, 역내 차원의 무역·투자 활성화, 분야별 협력사업의 추진, 민간 부분의 활동 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50)</sup>

첫째, 한·중 양국간 정상회의는 APEC이나 ASEM 등의 정상회의에서와 같이 양국간 협력 확대를 논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회담으로서의

---

50) 신용대 외 5명, 『한·중·일 경제협력의 발전방향』. [21세기 준비 연구보고서 시리즈, 2000-13], 2000.3.29,p117

성격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중 양국간 각료회의의 정례화가 마련되어야 한다. 통상, 환경, 중소기업, 재무 관련 부문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각료 회의를 정례화 하여 양국간 현안 과제에 대해서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토의를 통해서 정상회담에 대한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

셋째, 한·중 자유무역의 기구 안에서 다자간 무역체제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정상회담, 각료회담 및 고위관리회담 등을 통하여 WTO, APEC 및 ASEM 등과의 적합성을 위하여 각 기구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한·중 양국은 앞으로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하여 WTO에 합치되고 역외국을 저해하지 않으며 역내국의 상호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하여야 할 것이다. 추진 방식은 양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중 양국간 분야별 협력 사업은 고위관리회의(SOM)를 통한 협력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이의 조정을 통해 각료 회의에 보고하며, 협력 사업별로 구성된 분야별 실무 그룹 회의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추진하며, 협력 사업별 간사국을 지정, 실무회의 기본 운영 방향설정 실무회의 개최 등을 간사국 체제를 민간 부문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한·중 양국은 역내에서 민간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각 사업과 관련되는 문제에 한·중 양국간 비즈니스 포럼 등 민간 부문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정부간 협력 못지않게 분야별 소그룹에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양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 (7)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정부는 FTA로 인해 타격이 예상되는 취약 분야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손실을 보는 집단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가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

을 경우, FTA 체제는 출범 초지부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FTA로 이익을 보는 계층의 소극적인 보상 의지와 손실 계층의 적극적 보상 요구의 비대칭적 관계가 클수록 사회적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이 요망된다. FTA 진행 과정에서 보면, 내부의 갈등 봉합과 합의 도출이 대외 협상보다 결코 쉽지 않다. 정부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별로 FTA를 추진할 경우, 이해 집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상 원칙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중 FTA 체결시의 이해 관계자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FTA 추진과정에서 농업 부분을 너무 강조한다면 중국과의 FTA에서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상의 변수들을 고려할 때, 동북아 FTA 를 대비하여 주요 농산물을 FTA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51)</sup> 그러나 취약 부문에 대한 과보호는 국민 경제 전체의 비효율과 손실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항상 감안하고 있어야 한다.

## 2. 기업의 대응 방안

### (1) 각국의 경제 단체와 교류협력 강화

한·중 산업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중국 기업의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일률적인 관세율 인하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조치는 잠정적으로 유예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과의 기술 및 자본 협력을 추진할 경우 양국간 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창출하는 상호보완적 협력 부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화교계 단체 등과 민간경제단체에서도 한·중 자유무역협정 등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협력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수동적으로 중국 측의 제안에 임하기보다는 한국기업의 기술과 중국의 노동

---

51) 박변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특성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5, p.25.

력을 결합하여 다른 나라 진출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경로의 기술 이전 및 자본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2) 선진기업들과의 제휴 증대

FTA 체결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부존자원과 생산 자본이 빈약한 한국은 수출지향적인 성장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고속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대외여건의 악화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미국과 EU 등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내수 침체나 반덤핑조치, 무역제한조치의 도입 등은 한국의 수출부진과 이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동안 한국 기업은 중저가 제품의 대량 생산 체제를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왔으나 현재에 들어서는 중국, 동남아 등 저임금 국가들과의 가격 경쟁력에 뒤지고 있다. 제조 기술의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한 현재의 생산 체제를 첨단기술 중심의 생산 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 선진기업의 첨단 기술과 한국 기업의 생산기술, 마케팅 능력의 결합을 통하여 생산구조의 고도화와 수출 능력 배양이 절실한 바, FTA 체결은 선진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선진 경영기업의 도입을 촉진시켜 경영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FTA를 체결할 경우 우려되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구조조정 비용이 더 추가되어 단기적으로 더 큰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과 한국이 지금까지 다자 체제를 지지하면서 지역무역협정의 역외배타성을 강조해 왔는데, 이를 국제 사회에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가맹국 선진 기업과 비교할 때 자본 및 기술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기업과의 합병이나 제휴 또는 선진기업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통해 부족한 자본과 기술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 (3) 시장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

한·중 경제협력의 확대는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으로서는 시장 확대, 기술 개발이과 용이해져서 선택과 집중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각국의 기업은 한·중 경제협력을 예상하여 사업 구조를 재구축하는 기업적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을 고려하지 않은 산업구조는 중국 기업 사이에서 입지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FTA는 외국 기업으로 하여금 국내 투자가 가능하도록 모든 투자 시장이 개방되기 때문에 경쟁 관계에 있는 외국 기업의 집중적인 국내투자가 급증할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침체되거나 도산할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전에 경쟁 열위에 있는 산업은 비교우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가맹국내로 이전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기업은 경쟁력을 더욱 증대시켜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추격을 물리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의 진출시 교역 장벽 및 진입 애로점을 사전적으로 심층 조사하여 FTA 체결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비관세장벽, 기술장벽, 유통구조 및 상관행상의 문제점 등 잘 보이지 않는 교역 장벽의 제거를 통해 FTA체결 효과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FTA 체결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시 발생하는 국내 및 역내국 산업구조조정을 고려하여 새로운 무역 및 산업기회의 포착·선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FTA 체결에 따른 교역 및 투자확대 기회를 면밀히 조사분석함으로써 향후의 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이러한 기회와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4) 경영전략의 개선

한·중 기업의 경영방식은 정보비용을 절약하는 경영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기존의 각국 대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정보나 기술을 장기간에 걸쳐 축적하여 이를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정보 코스트가 싸기 때문에 종신 고용, 장기적 거래 비용을 절약하고, 기술, 판매, 경영능력 등의 정보를 기업내에 공유함으로써 정보비용을 삭감해왔다. 그러나 IT 혁

명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정보가 공개되면서 조직내 정보 축적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공개로 정보 수집·축적·분석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장기적인 생산·판매를 유지하는 것은 아직도 그 비용이 높다.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기업의 경영 마인드와 기업의 국제간 관계를 크게 변모시킬 전망이다. 첨단기술, 지적 재산, 표준화에 대한 의욕이 확대되어 기업의 국제적 연계를 촉진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FTA가 추진됨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에도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맞도록 경영 전략을 바꿔야 할 것이다. 즉, 경쟁력의 강화가 예상되는 업종에 있어서는 수출에 중점을 두고, 경쟁력의 약화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경쟁력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제 V 장 결 론

이미 잘 알려졌듯이 중국은 한국의 제1무역상대국이 되었다.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 시장 확대 가능성 및 동북아 안보질서 구축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FTA는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측면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유불선의 문화적 공통성과 지리적 인접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높은 공동체 의식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의식이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중 FTA는 다른 국가와의 FTA와 차별화된다.

세계교역 및 경제의 상호의존성 심화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속 에서 한국의 수출시장 여건은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FTA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세율 격차에 비추어 FTA 체결시 전기, 전자기기, 기계류, 석유, 화학제품, 철강 등의 대 한국 수입급증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여 FTA 추진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1위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향후 성장 가능성도 높으므로 FTA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제 관계가 다원화됨에 따라 기존 통상정책은 지역경제통합체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체간의 통합이라는 보다 다양화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권의 비중이 높아지고 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미일 중심의 태평양 라인만을 고집한다면 신흥 경제권으로 부상하는 동아시아와의 협력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한·중 FTA는 미국과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견제하고 패권구조가 아닌 다자방식에 의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70%에 가까운 나라로서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발전과 성장에 많이 의존

하고 있다. 그만큼 대외무역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FTA를 통한 세계시장 확보는 한국에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인 셈이다. 또한 FTA를 통해 ①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유지, ②지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 ③안정적 수출시장 확보와 한국기업의 취약성 극복, ④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와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⑤정치, 외교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동반자관계 형성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장점들이 많은 보물 상자와 같다. 이에 한국은 FTA를 적극적으로 지향해야 한다. 하지만, 한중 FTA는 꼭 장점만 존재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중국의 교역관계는 한국이 중국으로 중간재와 부품을 수출하고 중국은 한국에 완제품과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FTA가 추진될 경우 값싼 중국의 제조업 완제품과 농산물이 한국 중소기업과 농가의 생산품을 대체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며 중소기업과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로 제조업의 중국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 국내의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의 실업률 또한 증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지역주의의 흐름에 뒤져 있던 우리 정부도 최근 FTA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거대국가 및 주변국과의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다는 전력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한국은 중국과의 FTA를 통해 경제협력 제도화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중국 기업의 기술능력 향상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이 위축되고 FTA로 인한 무역효과가 잠식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시장을 FTA를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침체는 벗어 날수 있게 되겠지만, 한걸음 더 생각하여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한·중간에는 관세,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며 시장, 산업, 정보기술 교류에 장애요인이 많아 비용이 높고 시스템과 정책의 조화와 법규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다. 만약 이런 장애요인들을 극복할 수 없다면 양국간의 무역 투자 증가는 언젠가는 제한될 것이다. 무역구조와 수출시장의 유사성으로 인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며 무역마찰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런 장애들을 제거 하려면 무역과 투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여야 하는데 양자



간 자유무역 협정체결이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한국은 지역 및 자원적 조건이 여타 국가에 비하여 불리한 상황 하에서도 수출 증대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경제가 성장되어 왔으며 앞으로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라도 무역과 해외투자 등 해외부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WTO출범 이후에도 지역주의 성향이 계속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또한 세계경제가 몇 개의 지역통합으로 재편되어 가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향후 추진가능성이 있는 한 중 FTA에 대처 하여야 한다. 한·중간의 FTA는 양국의 무역 규모를 확대 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적, 정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고성영, 「경제동향 및 전망보고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03.
- 김남두, 『자유무역화와 경제구조 개선의 후생효과 추정』 국제경제연구
-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2004.
- 김석균, 『FTA의 세계적인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1999.
- 김 위, 「중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4.
- 김정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3
- 김준봉, 『다시 중국이다』, 지상사, 2005
- 나형근, 『자유무역협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경련 국제본부 미주협력. 2000.
- 남영숙 등,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주요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박순천, 『한국 FTA 추진의 전망과 과제』, KIEP 세계경제 5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박번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특성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5
- 여지나, 『중국 FTA 추진목표와 주요이슈』 [월간 KIEP 세계경제] 1월호 2006.
- 유종언, 『한·중·일 산업협력의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0.
- 이택현,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경제」 연세대학교, 2003
- 전의천,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제23호 제2호 조선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01.
- \_\_\_\_\_, 『국제무역의 의해』, 조선대학교 출판국. 1998.
- 정인교,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 제2권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 \_\_\_\_\_,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1.
- \_\_\_\_\_, 『자유무역협정(FTA) 이해하기』 2001.
- \_\_\_\_\_,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정상호,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대응방안」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6
- 최원기, 『중국의 한·중 FTA 추진 배경과 한·중FTA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국안보연구원 2006.12
- 황동연, 『중국의 성장 전략 변화와 우리 대응』. 현대경제연구원. 1999.
- 赵晋平, 「从推进 FTA 起步·我国参与区域经济合作的新途径」 国际贸易 第6  
期2003
- 张建平, 「中韩自由区的设立对中国主要制造业的影响」 CSF 전문가칼럼 2006.5.2  
일게재
- 李章揆, 李麟求, 吕智娜, 赵显埃, 「중국의 FAT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11
- 郭继丰, 中国FTA战略: "合作共赢全球均衡" [第一经济日报].
- 宝建成, 陈柳钦, 『世界双边FTA的发展趋势与我国的对策探讨』 经济学研究,  
No.11
- Frabkel J.,ed. 『The Region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 Lee, Margaret C. 『The US and EU-Undermin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Africa』 「News from the Nordic Africa Institute」,2004.
- Perroni,C. and J.Whalley, 『Possible Developing Country Impacts from a  
Competition Policy Nego-tiation』. 『Developing and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Volume II』,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1998,
- Trilateral Joint Research, 『 Research on the Free Trade Area among Japan,  
China and South Korea』, NIRA,2004.

- , 「FTA 추진에 따라 산업별 득실분석」, 「CEO Report」 제44호, 2005  
한국국제통상협회, “2002 한. 중. 일 FTA남경 국제통상정책 포럼 및 국제학술  
대회” 자료집, 2002
- , 「중국-WTO 가입 이후 은행부문 개혁과 우리의 진출기회」, 수은해외경  
제, 2006
- , 『한-EU FTA 현황과 전망 그리고 추진전력』 높이깊이 출판국. 2007
- ,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00)분석 및 실증연구」 서울: 한국경제연  
구원 2005
- , 「2006 중국 경제 전망 세미나」 2005
- , 「한-체레 FTA 발효 3년 평가」. 2007b
- , 「한-싱가포르 FTA 발효 1주년 평가」. 2007a.
- 한국국제통상학회, 한국무역협회, 「2002 한. 중. 일 FTA 남경 국제통상정책 포  
럼 및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02.7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 통상정책의 재점검」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남영속등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와 주요 쟁점」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한국수출은행 (<http://www.koreaxim.go.kr>)

대외경제연구원(<http://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원(<http://www.ser i.org>)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통계청(<http://www.nso.go.kr>)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중국상무부 (<http://www.cei.gov.cn>)

중국국가통계구([www.stats.gov.cn](http://www.stats.gov.cn))

상해협력기구(<http://www.sectsko.org>)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무역학과	학 번	20067706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왕혜도 한문 : 王 惠 濤 영문 : Wang hui Tao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연락처	E-MAIL : pepsi-cn@hanmail.net				
논문 제목	한글 : 한·중 FTA의 기대 효과와 대응방안 영어 : A Study on the Expected Effects and Countermeasures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0 ), 반대 ( )					
2007 년 11 월 7 일					
저작자: 왕 혜 도 (서명 또는 인)					
<h3 style="margin: 0;">조선대학교 총장 귀하</h3>					